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헤드라인(Headline)							
운영일시 / 장소	일시 :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 장소 : 사회경영2관 13311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김*아	학번	2021****	이름	장*림
	학번	2021****	이름	정*성	학번	2021****	이름	최*수
	학번	2022****	이름	배*휘	학번	2024****	이름	김*현

**\* 읽은 책:**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책세상(2025.03)>

**\* 토의 내용:** 자유론을 읽으며 생긴 주장이나 가치 판단을 토론하고, 사회문제와의 연결을 통해 자유론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통용되었는지 살펴본다.

**\* 김\*아(참가자대표) - 토론 흐름 정리 및 보충 의견**

『자유론』에 대한 토론에 앞서, 저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 배경지식을 먼저 공유했다. 토론원 대부분 공리주의 자로서의 밀을 접한 바 있었고, 북클럽에서 밀의 사상을 처음부터 함께 공부해보자는 자세로 토론에 임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원칙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녹여냈는지를 중심으로 『자유론』을 읽었고,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았다.

인상 깊었던 구절로 “신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따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노예근성”에 대한 내용을 나눴다. 이는 사회 내 강한 세력에 따라 보편적 규범이 형성되고, 여론 또한 그에 순응하는 구조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백종원’의 뺑뺨 가격 논란과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에서의 레시피 활용 문제를 사례로 다뤘다. 함량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 책정되었음에도 사회적으로 큰 비판 없이 넘어가는 분위기를 ‘노예근성’과 연결지었고, 이는 백종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우호 여론이 형성한 영향력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광화문 집회나 팬덤 정치의 사례를 통해, 인기 있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맹목적 지지가 어떻게 공론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도 논의했다.

밀은 “행동에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 구절은 다소 폭력적으로도 느껴졌다. 그러나 이 말은 곧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론』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해악금지 원칙’과도 연결된다.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타인에 의해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를 보호하는 권리는 정당화된다는 점을 배웠다. 이처럼 충돌이 불가피한 자유들 사이에서 해소의 과정을 찾아가는 것이 곧 토론의 본질이며, 그런 의미에서 북클럽의 첫 책으로 『자유론』을 선택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

‘규제’라는 키워드 아래 ‘대왕 카스테라 사건’을 토론 주제로 삼았다. PD수첩이 보도한 위생 문제 이후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사례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했다. 인간의 자유는 잘못을 인식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밀의 주장에 따라, 소수의 잘못된 의견일지라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론도 함께 논의했다. 언론의 과장 보도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을 때, 이를 통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는 책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우리 사회에 ‘토론의 부재’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우리는 토론 부재의 이유를 토론 행위의 문제점에서 찾았다. 밀은 “상대의 의견이 실제로 어떤지를 냉정하게 검토해야 하며, 그들의 신용을 깎아내리기 위해 과장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감추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공적 토론의 기본 윤리다. 하지만 현실에서 논리보다는 도덕성이나 이미지 공격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처럼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건강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가치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기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가?” 즉, 남을 비방할 자유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토의했다. 어떤 의견은,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장되어야 하므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존재하며, 도덕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밀은 다수가 비판을 원할 경우, 언론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유의 중요한 덕목으로 ‘개별성’을 강조한 밀의 입장을 다뤘다. 한 개인의 행동 기준이 고유한 개성이 아닌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결정될 때, 인간의 행복은 크게 훼손되며 사회 진보도 멈추게 된다. 개별성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진보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회가 개성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동성애나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가 자유의 표현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했고, 개인의 혐오 감정은 자유일 수 있으나 이를 표현하고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밀은 자유에는 개인의 의무가 수반된다고 강조한다.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을 해하거나 괴롭히지 않기 위한 노력과 책임은 모든 개인이 분담해야 한다.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가 성립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과 그에 따른 책임을 함께 설명한다. 우리는 『자유론』을 통해 자유의 진정한 의미와 그 한계를 이해하고, 더 발전된 자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 \* 장\*림 - 각 장의 내용에 대한 의견

### 1장 - 서론

1장에서는 이영돈 PD의 ‘대왕 카스테라 사건’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당시 이영돈 PD의 다소 과장된 언론 보도로 인해 대왕 카스테라 업체는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해당 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토론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었다. 과장된 보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지금은 사실 여부가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잘못된 정보도 바로잡혔다. 나는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 보도를 사전에 제어하겠다는 명분은 오히려 진실된 언론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며, 언론인이라면 그 책임의 무게를 자각하고 항상 공정성과 사실성에 기반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느꼈다.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논의는 언론인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스스로에게 되묻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 2장 - 사상과 토론의 자유

2장에서 가장 인상깊게 읽은 구절은 “인간의 판단이 지니는 모든 힘과 가치는 그 판단이 틀렸을 때에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데 달려있다. 그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언제나 마련되어 있을때에만, 신뢰가 생겨 날 수 있다”라는 구절이다. 틀린 의견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둔 밀의 이런 관점 덕분에, 나는 소수의 의견도 단순히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소수의 목소리 속에 다수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이 자유로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고 느꼈다. 밀은 표현의 자유를 단순히 개인의 권리로만 보지 않고, 사회 전체가 진리에 더 가까워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이 구절은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억제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진정한 신뢰는 침묵이 아닌 열린 논쟁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 3장 - 인류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개성 (개별성)

3장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토론을 나눴다. 동성애는 명백히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밀의 주장대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한,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와같은 맥락에서, 동성애도 각자의 개성과 삶의 방식 중 하나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동성애를 비판하는 의견 역시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다른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말할 권리 자체를 무조건 억압해선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동의할 수 없는 의견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밀의 자유론이 지향하는 바라고 느꼈다. 그러나 비판을 넘어선 혐오와 차별적 언행 등은 명백한 폭력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타인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밀의 ‘자기 보호의 원칙(harm principle)’에 비추어 보아도, 이런 혐오 표현은 자유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도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가 충돌할 때 우리가 얼마나 섬세하게 그 경계를 고민해야 하는지를 체감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은 앞으로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4장 및 5장 -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 및 현실 적용

해당 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역시 ‘해악의 원칙(harm principle)’이라 생각한다. 어떤 개인의 행동이 사회나 국가에 의해 간섭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이유는, 그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뿐이라고 밀은 반복해서 주장한다. 이 원칙은 매우 단순하지만, 동시에 깊이 있는 기준이다. 단순히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진정한 자유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신분인 나는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에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고민할 일이 많아졌는데 자유론을 읽으면서 그 고민을 보다 철학적이고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해악의 원칙은 자유의 본질이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타인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준다. 밀은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행복을 침해하는 순간 사회의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무제한적 자유가 아닌, 책임 있는 자유를 강조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 결국 해악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는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철학적 토대이며, 나에게도 앞으로 사회 문제를 판단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있어 반드시 되새겨야 할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 \* 정\*성 - 각 장의 내용에 대한 의견

### 1장 - 서론

서론에서는 '자유'에 대해 정의하면서 권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밀은 '다수의 횡포'를 경계하면서 다수의 방식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집단의 생각이 나 의사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 개인의 독립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개인의 자유에 대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무제한적 보장이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해악의 원칙'의 기반하는 개인의 자유는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론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유의 기본 원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앞으로 서술할 주제와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 2장 - 생각과 토론의 자유

2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과 '토론'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과 경청의 자세는 이 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밀은 토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억압하는 다른 의견이 옳은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다수의 견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며, 서로 다른 의견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밀은 특정 의견이 옳다고 가정하여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죽은 진리라고 말한다. 자신이 믿는 사실이 진실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은 토론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오류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신의 실수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남에게 강요한다면 결국 다른 사람의 자유를 막아서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리주의'를 천명한 밀에게 마치 역설처럼 다가왔다. 따라서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자신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는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별, 인종, 종교, 서로 다른 정치적 갈등부터 전장연과 동덕여대 시위 문제까지 사회 전반에 아우르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토론과 경청, 그리고 오류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 비록 사회가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의 구도로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이준석의 전장연 토론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전장연 시위가 극단에 이어지자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맞토론을 내세우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실제로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공개 토론을 통해 서로의 견해와 입장을 공유할 수 있었다. 비록 이 둘의 토론이 담대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민감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에 나서면서 공론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토론과 경청을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곳이지만, 어째서 가장 기피하고 심지어 관용의 자세는커녕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으로 비하라는 태도를 일삼는다. 서로의 유권자를 지키기 위한 본능으로 당면한 현실의 문제와 갈등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다. 회피는 책임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 서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류가능성을 인정하고 토론과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3장 - 인류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개성 (개별성)

3장에서는 인간 개개인에 대한 주체성과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밀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각자의 개성을 다양하게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관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각자의 개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사회에서 유지되어 온 ‘관습’과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관습에 억눌려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때로는 오히려 비판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각자의 개성을 획일적으로 묶어두기보다 서로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 4장 -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

4장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한 규칙으로 해악금지의 원칙에 대해 강조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자유는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의 공격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노동과 희생의 일정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인의 덕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개인의 사적인 문제까지 개입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등은 부당하며 이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타인의 해악금지의 원칙과 국가의 최소성을 바탕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5장 - 현실 적용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앞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밀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방해받지 않고 추구하는 것이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된다. 다만 사회가 경쟁에서 진 쪽을 편들어 결과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도덕적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경쟁에서 이긴 쪽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어긋나는 방법이거나 위계, 강압과 같은 경우일 때만 간섭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각자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칠 때에 대해서는 사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며, 사회가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처벌까지도 부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이 부분에서 밀의 ‘공리주의’ 사상이 엿보이는 대목이자, 개인의 자유와 공중의 이익 간의 조화에 대한 밀의 입장이 드러난다. 또한, 국가의 권력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으로부터 나온다면 국가의 간섭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국가가 할 때보다 개인에게 맡길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사람들은 자유가 보장될 때 높은 수준의 결과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밀은 자신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고, 토론과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편견과 관습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유에 대해 말한다.

## \* 최 - 각 장의 내용에 대한 의견

### 1장 - 서론

밀은 책의 도입부에서 자유란 ‘시민적, 사회적 자유’고, 자유론의 주제는 “사회가 합법적으로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밝히는 것이라 했다. 즉 자유론은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그리고 자유의 합당화를 위해 자기보호의 개념을 제시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가 가진 자유는 절대적이다. 또 타인이 내 자유를 침해하려고 한다면, 나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

하면서까지 내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자기보호의 개념이다. 또 밀이 말하는 자유는 '말할 자유'다. 자신의 의견이 정답이든, 오답이든 관계없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말할 자유는 내가 평가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설령 한 사람의 의견이 확실한 오류일지라도 발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밀의 주장이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밀은 진리는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에 의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언의 자유를 중시했다. 틀린 의견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 때도 있다는 의미다. 또 밀은 "의견에 대한 판단 오류는 무오류의 독단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자신이 절대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오류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스스로를 믿는 것은 분명 살아가면서 필요한 태도이지만, 그런 믿음 속에서도 자신이 잘못하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지닐수록 더욱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늘어날 것이다.

서론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마냥 자유를 찬양하려는 책이 결코 아니다. 제목도 엄밀히 표현하자면 자유론이라기보다는 시민론에 가깝다. 그러나 시민이 정치적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시민적 자유'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자유라는 정치적 개념에 대한 일반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 1장 중심의 토론에서도 우리는 자유라는 개념을 마냥 찬양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무제한적인 자유가 가져올 수 있는 해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는 밀이 자유가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선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다. 주요 논제는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였다. 사례로는 '먹거리 X파일의 대왕 카스테라 보도' 사건이 제시됐다. 대왕 카스테라의 지방 함량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정도로 많다는 내용을 주장한 먹거리 X파일이었지만, 이는 왜곡 보도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수많은 대왕 카스테라 업장들이 실제로 폐업하거나 폐업 위기까지 내몰렸다.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해놓고, 피해가 생기면 그때 언론사에게 국가 권력으로 징계를 가한 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완벽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내러티브 보도 형식을 취하는 '먹거리X파일' 등의 'PD 저널리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팀원들과 토론한 이후에는 언론 자유를 제한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언론 자유 제한 자체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민주주의적 피해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사후 처방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사 스스로의 자율 규제와 정정보도, 보도 이전 팩트체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및 제도적 권유가 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언론인의 도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 2장 - 사상과 토론의 자유

밀은 이 장에서 어떤 한 의견이 아무리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 의견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틀렸을지라도, 절대로 그 의견을 내는 것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시대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므로 각자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고 믿어지는 시대, 그래서 공리주의적 사고가 사회의 윤리적 원칙으로 자리 잡은 시대, 또 그래서 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시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옳음'은 '다수의 주장'이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므로 어떤 현상이나 일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진실 여부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진실을 꿰뚫는 것이 아닌 진실에 최대한 근접하고자 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므로 옳은 주장을 할 가능성도 같다고 가정한다면, 진실에 가장 근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인간의 공통된 주장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옳음을 위한 가장 옳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옳음은 다수의 주장이 된다. 민주주의는 인간 평등을 가치로 보장한 후 국가의 주권을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이데올로기이고, 법치주의는 평등을 법으로써 보장한 후 국가의 운영을 법으로써 실행하는 이데올로기다.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만나게 된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법의 구성이 실현된다. 다수결의 원리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반박이 불가능한 옳음이다. 그런데 과연 다수결은 항상 옳은가? 다수결은 오류가능성이 전무한가? 그렇지 않다. 모든 의견은 몇 명이 동의했던, 심지어 만장일치로 동의했던,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즉 다수결은 오류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이지 언제나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다수결의 원칙을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하되, 다수결도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최종적으로는 다수의 의견이 채택될지라도 소수가 그에 반대할 자유를 뺏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두의 의견이 결론에서 존중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자유론을 말하고 있다.

### 3장 - 인류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개성 (개별성)

자유론은 정답을 찾기 위한 책이 아니다. 정답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진리인 동시에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설령 우리가 본래 가진 도덕적 지혜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오류가능성이 있다. 즉 인간인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밀은 이 사실은 진작에 알고 정답을 찾기 위한 길보다는 오히려 '정답'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저지를 수 있는 폭정에 대항하려 했다.

자유론은 핵심키워드는 바로 '다양성'이다. "이 책에서 전개되는 모든 논의가 직접 지향하는 숭고한 기본 원리는, 인간을 최대한 다양하게 발달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이고도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다."라는 빌헬름 폰 훔볼트의 말은 밀의 자유론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래 철학은 진리를 찾기 위한 여정이지만, 밀은 오히려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진리를 찾아가면서도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우리 사회는 현재 획일화를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획일화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인간 존중의 원칙은 잊히고 인간이 그저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이런 시대에 자유론이 주는 의미는 확실하다. 우리는 사회 속에 속해 있지만 개인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개인으로서 존중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더이상 인간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닌 기계로 대우받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의 성장률에만 집중한다. 소외된 약자나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로 강하고, 또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지에만 관심을 보인다. 다수의 의견에만 관심을 보이다 못해 이제는 국민들 모두를 '한국'이라는 국가 아래 놓고 판단한다. GDP가 계속 성장한다고 해도 빈부격차는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다. 최소한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큰 문제다. 이제는 정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다양성과 개성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선진국(先進國)이라는 단어는 어디론가 앞서가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를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골(Goal)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자유론을 읽다 보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말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앞으로 나아가는 국가가 아닌 앞부터 뒤까지를 골고루 잘 챙기는 나라, 모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건전한 국가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 4장 -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

사회는 '해악금지 원칙' 아래서만 개인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가끔 다수결의 권력은 폭주해 소수의 자유를 탄압하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폭정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함에도 밀은 민주주의 사회를 옳은 정치 형태로 규정했다. 그 이유는 최후의 보루라고 불릴만한 언론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4부라고 불리는 언론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횡포를 막고,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언론의 권력 견제 역할이 필수적이다. 즉

(언론의) 자유를 통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익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애초에 기자, 아나운서 등의 언론의 구성원들도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이며, 언론의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선 재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본래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사실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만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정보를 왜곡하여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보도한 뒤 그 집단에 돈을 받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든지, 정부에게 여론이 종속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식 언론이 아닌 회사가 언론의 형식을 가장하여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성행한다는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가 왜곡된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다. 게다가 그 정보를 왜곡하는 주체가 언론이라면 시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다. 언론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에서 시민들의 자유는 시민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사회에 참여해 우리의 뜻을 정부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 5장 - 현실 적용

참된 판단은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밀의 의견은 우리 사회에 꽤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암기식 교육에만 치중돼 있으며, 창의성 교육이나 토론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지식을 반복해서 복사해내기만 할 뿐 생산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식이라면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새로운 의견에는 거부감이 들지만, 가능성이 있는 의견들이 계속 나와야 사회는 더욱 다양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계속되는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해 토론식 교육은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정치 분야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의견만 맞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의견은 탄압하는 식으로 오히려 토론이 과열되는 것이다. 건전한 토론 문화는 찬반을 가르고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식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토론은 자신이 타인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사회분열만 일으킬 뿐이다. 건전한 토론 문화를 위해서 교육의 질 개선과 정치인들의 성숙한 태도 함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아직 희망은 있다고 생각한다. 독재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스스로의 자유를 해방시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화 운동 등 전부 시민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스스로 들고 일어난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건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비판과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밀이 말하는 '자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를 올바르게 발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나는 관용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에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한다. 관용은 매우 중요하다. 타인을 인격체로서 대하고 그들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내 자유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소중하다는 것을 공감능력을 통해 깨달음으로써 생기는 덕목이 바로 관용이다. 밀이 말한 자유로운 사회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각 개인이 스스로 모두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타인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된 개인임과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를 올바르게 이끄려는 태도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의견과 반대된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닌 관용으로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배\*회 - 각 장의 내용에 대한 의견

### 1장 - 서론

이번 토론은 자유론이라는 책과 더불어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입장에 대해 이전보다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책을 읽고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획득하는 행위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서론에서도 마치 토론 활동의 갈피를 잡게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의미가 깊었다.

## 2장 - 사상과 토론의 자유

2장을 읽고 가장 피부에 와닿았던 말은 “진리가 비판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생명력과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라는 말이다. 이는 억압된 의견이 진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틀린 의견조차도 표현되어야 사회적으로 성숙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SNS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만연한 오늘날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밀의 의견처럼 좀 더 폭넓게 사회구성원들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가 그려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다.

## 3장 - 인류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개성 (개별성)

3장에서는 각자의 개성을 강조한다. 매우 당연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누구나 곁으로 크게 표현하지는 못해도 자신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출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은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바로 내뱉는 자세는 잘못되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비로소 그나마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생활 양상이 그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된 3장이었다.

## 4장 -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

4장에서는 “그렇다면 개인 각자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해악원칙”을강조함으로써 타인과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달하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개성과 자유를 만끽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서로의 기준과 가치관, 세계관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의견이나 입장이 기준점이 되더라도 모두가 만족하는 그림은 현실적으로 그려질 수 없다. 결론적으로 4장에서는 이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인지 쉽게 판단이 가능한 현상과 그렇지 못한 현상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았다.

## 5장 - 현실 적용

5장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강조한다. 어디까지나 사회와 국가의 간섭이 지나친 모습이 그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면서 각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 내용들을 통해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역할들이 잘 수행되는 것이 가장 먼저 달성되어야 할 현안이라고 생각했다. 그 누구도 불안한 사회에 몸을 함부로 믿고 맡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론이라는 책과, 구성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평소 생활에도 적용함으로써 내가 나의 의견을 너무 강력하게, 혹은 너무 소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봄으로써 보다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경험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 김\*현 - 각 장의 내용에 대한 의견

### 1장 - 서론

자유론의 서론에서는 자유의 개념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대략적인 전제가 담겨 있다. 자유가 최고 권력자에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다수의 횡포와 개별구성원에 대해 집단이 권력을 휘두를 것 또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큰 해악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이성 의 뒷받침이 없다면 그 판단은 개인에 선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1장 서론에선 팀원들과 함께 앞으로 이어질 자유론에 대한 토의의 가닥을 잡는 시간이었다.

### 2장 - 생각과 토론의 자유

2장인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서는 기존에 의견이 맞건 틀리건 그 의견에 대한 자유롭고 열린 토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소크라테스, 아우렐리우스, 종교 등 다양한 예시를 들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팀원들과의 토의에서는 서로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대왕 카스테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과연 올바른 것인가?,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 사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다른 의견에 대해 존중하며 불편하지만 참고 듣는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3장 - 인류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개성 (개별성)

3장은 인간의 개별성에 대해 다룬다. 3장을 읽고 문득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였다. 태어날 때부터 사회 속에서 살아온 인간에게 개별성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언제나 낡은 관습에 저항하며 변화해 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몽상가라 불리는 천재들에게 자유의 공기 속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 4장 -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

4장인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은 '해악 원칙'이다. 이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간섭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저자는 자유롭게 위해 사회가 최소한의 간섭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규칙 없는 무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개인이 사회를, 방어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공격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노동과 희생 중에서 스스로 맡은 바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도덕적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 5장 - 현실 적용

5장인 '현실 적용'에서는 마지막 장인 만큼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논리들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말한다. 정부의 간섭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질서가 훼손될 경우에만 정당화되며 개인의 자율과 개인이 모인 사회의 자유,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상 깊었던 구절은 '자유 원칙이 자유롭지 않을 자유 즉 자유를 포기할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문장이었다. 자유론을 읽고 팀원들과 대화하면서 혼자 읽을 땐 볼 수 없었던 부분과 생각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25년 4월 10일

참가자대표 : 김\*아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헤드라인(Headline)							
운영일시 / 장소	일시 : 2025년 5월 1일 (목요일) / 장소 : 사회경영2관 13311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김*아	학번	2021****	이름	장*림
	학번	2021****	이름	정*성	학번	2021****	이름	최
	학번	2022****	이름	배*휘	학번	2024****	이름	김*현

\* 읽은 책: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빌 코바치, 톰 로젠스틸 하인리히 빌. 한국언론진흥재단(2021.12)>

\* 토의 내용: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에서 자유론의 정의가 뒷받침되는 이론을 찾아 토론하고, 실제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따른 바른 사례나 따르지 않은 사례를 찾아 토론한다.

\* 김\*아(참가자대표) - 책을 읽고 느낀 점

첫 토론에서 다룬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사람이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전했다.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끼치는 해악의 경우는 행동함으로써 끼치는 해악보다 훨씬 신중하게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경우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존 매케인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이 하노이에서 5년 반을 전쟁 포로로 갇혀있는 동안 가장 그리워한 것은 안락함도, 음식, 자유도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도 아니었다고 한다. 그가 가장 그리워한 것은 정보였다. 검열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으며 풍요롭고 자유로운 정보를 가장 원했다. 우리는 알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뉴스가 필요하다. 그것이 저널리즘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 저널리즘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가짜 뉴스 웹 사이트를 이용한 유사 저널리즘처럼 지금은 누구나 모뎀과 컴퓨터만 있으면 저널리즘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보급돼 있으니, 아무것이나 저널리즘으로 보기 시작했다. 기술 발전 저널리즘이 무서운 이유는 수용자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겸 소비자”가 되면서 이제 아무도 정보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유 언론은 어떻게 자유를 수호하는 존재로 작동할까?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는가?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이에 저널리

좁은 민주주의의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공공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시민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저널리즘은 그들의 잠재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한다.

언론 자유의 개념은 독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자유는 정당이나 광고주, 기업 등 다른 기관들로부터의 독립을 포함하도록 의미가 확장됐다. 저널리즘의 1차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고, 그들이 자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저널리즘의 첫 번째 의무는 진실에 대한 것이다.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황색 저널리즘의 형태를 우리 언론은 주의하여야 한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는 “저널리즘이 가장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시민들”이라는 것이다. 자유 저널리즘이 힘든 이유는 경영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자들도 이 말에 동의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한다. 기왕이면 우리 뉴스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면 더 좋다.”

<자유론> 토론에서 나왔던 “대왕 카스테라 과장 보도”에 대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나온 탐사보도 양식을 적용해 해석했다. 탐사 저널리즘에는 주요 3가지의 양식이 있으며, 원래적 의미의 탐사보도와 해석적 탐사보도, 수사에 관한 보도가 있다. 대왕 카스테라의 경우 원래적 의미의 탐사보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해석적 탐사보도로 이어졌으면 대왕 카스테라 과장 보도에 대한 논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의 탐사보도와 해석적 탐사보도 모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발굴하고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보도를 말한다. 그러나 해석 수준의 차이가 있는데, 원래적 의미의 탐사보도가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취재해 공중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면, 해석적 탐사보도는 한 문제에 대한 면밀한 고려, 분석의 결과와 치열한 사실들의 추구를 결합해 정보의 수준을 더 새롭고 완전한 맥락까지를 포함하도록 해 공중들에게 한층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접근법이다. 이 작업은 단순한 폭로보다는 훨씬 복잡한 쟁점을 다루고, 사실들의 복합적 관계를 취급한다.

탐사보도의 중요성을 다룬 이유는 탐사 기사는 밝혀지는 대상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탐사보도는 어떤 주제에 대한 단순한 조명에 그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폭로성 기사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기에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경우, <자유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정정하는 것까지 언론의 의무이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그리고 원칙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배경에는 <자유론>의 정신이 닳아있다. 자유론의 행동 기준은 어떤 의견도 강제로 침묵시키지 않고, 그 의견이 진실일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권리로 간주해야 할 특정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데 있다. 기소로서의 탐사보도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중앙일보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맞춰 기사를 작성하는가 살펴보겠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그러하겠지만, 신문의 지면 1면은 정치. 경제 뉴스가 차지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생활이 전면 보도되고 있다. 언론사는 여기서 정치적인 편애를 두면 안 된다. 특정 후보에 호의적인 기사만 내거나 악의적인 기사를 주의해야 하며 노출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 언론사는 한 개인의 대변을 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신문을 살펴본 결과, 중앙일보는 이런 정치 기사 노출에

공정한 비율을 따르고 있다. 한 지면에 주요 후보들을 배분하여 기사를 작성하였고, 위. 아래 순서는 시민의 관심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배분하였다. 그러나, 한 지면에 주요 후보들을 정리 보도한 것은 그들의 대비를 살렸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기사 제목과 내용은 서로에 대한 비판이 가득하다. 실질적인 정치권에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문제지만, 기사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이 양극화를 일으켜 국민들까지 분열된다. 분란을 '사실'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지만 오래 시행된 법과 절차에도 새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일상에서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원칙이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만들어 낸다면 주의해야 한다.

중앙일보는 15일, 전 대통령인 윤석열의 탈당에 관한 김용태 의원과 김문수 후보의 상반된 입장을 보도했다. 30대 청년 정치인인 김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강조하며 중도층을 향한 쇄신의 목소리를 낸다면, 김 후보는 지지층을 달래며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딛으려 한다는 당내 조율된 분리 대응이라는 시각의 메시지를 실었다. 국민의 힘이 당원들과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치인들의 입장이 있는 그대로 신문에 실렸다고 믿어야 하는 건지. 이 기사는 우리에게 김 의원과 김 후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신는 것을 넘어, 이 행동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알리며 저널리즘의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 \* 장\*림 - 책을 읽고 느낀 점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은 그야말로 '저널리즘이 무엇이어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언론인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이 책은 여러가지 언론이 지켜야하는 원칙을 중심으로 언론이 가져야 할 책임과 윤리에 대해 짚어 나간다. 나는 이 책을 단순한 교과서가 아닌, '언론의 양심'이 기록된 선언문처럼 느끼며 읽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원칙은 "저널리즘의 첫 번째 충성 대상은 시민이다"라는 말이었다.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자주 배신당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언론은 권력의 개가 되어 정보를 유리하게 왜곡하거나, 상업적 논리에 따라 '팔리는 기사'를 쓰는 데 집중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 이 원칙은 언론인 한 명 한 명의 윤리적 신념 없이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의 언론 현실을 떠올렸다. 최근 몇 년간 연예인, 정치인, 혹은 평범한 시민까지 언론의 과장된 보도로 인해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해왔다. 정확한 사실 검증 없이 '~했다는 주장, 아님 말고' 식의 헤드라인과 기사 전개 방식은 클릭을 유도하지만,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저널리즘의 원칙 중 하나인 "사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너무 자주 생략되거나 왜곡된다. 때로는 '진실'보다 '속도'가 우선시되고, '명확함'보다 '선정성'이 앞서는 언론을 볼 때면, 이 책이 제시하는 원칙들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지켜지지 않는지를 절감하게 된다.

책에서는 또 하나의 핵심 원칙으로 "권력 감시"를 언급한다. 언론은 본질적으로 '감시견'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언론을 보면 권력을 감시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권력의 프레임에 편승하거나, 아예 권력의 일부처럼 움직이는 경우도 많다. 나는 이 지점에서 "저널리즘이 스스로 정치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언론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때, 시민은 사실이 아니라 여론 조작의 대상이 되며, 민주주

의는 그 기반부터 흔들리게 된다.

나는 언론을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공공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언론이 옳기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그 언론을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 책은 언론인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시민으로서 뉴스를 소비하고 언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위한 책이기도 했다.

저널리즘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공동체의 대화와 사고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투명해야 하고, 더욱 겸손해야 하며, 더욱 책임감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내가 뉴스 한 줄을 볼 때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뉴스는 매일 쏟아지지만, 그것이 진짜 ‘뉴스’인지, 아니면 단지 ‘정보의 외피를 쓴 오락물’인지, 판단하는 건 결국 우리 시민의 몫이라는 걸 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느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내가 직접 뉴스를 쓰고, 논평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과거에는 ‘객관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후, 뉴스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그 정보가 갖는 맥락과 영향력까지 고민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논평을 쓸 때마다 “언론의 첫 번째 충성 대상은 시민”이라는 원칙을 떠올리며, 내가 쓰는 문장 하나가 누군가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자주 자문하게 되었다.

뉴스를 다루는 사람이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느냐’의 문제는 단지 취재의 방식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언론의 윤리, 나아가 민주주의의 질을 결정짓는 문제다. 이 책은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나침반 같은 책이다. 기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돕는 교과서이자, 동시에 시민으로서 언론을 감시하고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철학서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책을 읽고 난 후 내가 얻은 가장 큰 변화는, ‘기사를 쓰는 손보다 기사를 읽는 눈이 먼저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의 뉴스 논평에도, 나의 언론관에도 분명한 기준점을 세워주었다. 저널리즘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꺼내 읽고 싶은, 언론의 ‘기본’을 일깨워주는 책이다.

## \* 정\*성 - 책을 읽고 느낀 점

결국 언론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의 골짜기로 밀어 넣었다. 그 중심에는 언론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지어 “요즘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레거시 미디어의 몰락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과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레거시 미디어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러한 언론 지형에 변화가 생기게 된 시점은 ‘유튜브’라는 매체가 등장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는 정보의 확산성과 간편한 접근성을 강점으로 한다. 같은 정보라도 유튜브에 퍼진 정보가 더 빠르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다. 레거시 미디어가 소셜미디어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되면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에 맞추기 위해 기본적인 사실조차 검증하지 않거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 1분 만에 압축해 왜곡하는 과감한 방식도 마다하지 않게 되었다.

레거시 미디어의 이러한 행태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극단에 치달았다. 언론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립적 태도’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입장과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나란히 보도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앞에서도 언론은 기계적 중립이라는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서는 객관성을 이야기하면서 ‘독립성’에 대해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애초에 갖고 있던 생각”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인식해야 비로소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 언론이 진정한 객관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먼저 ‘합리적 가치 판단’의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진보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각자 나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객관성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손석희는 이를 두고 “‘합리성’을 잃는다면 민주주의나 인본주의는 고사하고 그 악어의 무리가 되지 말란 법 없다.”라고 경고하면서 언론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합리적 진보’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말하는 ‘합리성’은 단순한 논리적 사고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포함한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언론은 기존의 현상과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비판의 시선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다원적 관점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서 역지로 균형을 맞추려는 태도가 오히려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은 특히 언론이 사실을 교묘하게 취사선택하는 경우에 문제를 일으킨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따옴표 저널리즘’ 역시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보도다. 이는 ‘균형’을 넘어서 ‘공정성’마저 상실하게 만들고 최소한의 진실의 가치조차 검증하지 못하게 만든다.

사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언론은 ‘음모론’을 다룰 때 특히 경계해야 한다.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음모론에 빠져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언론이 사실로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하는 경우, 대중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설령 일부 사실이 검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혹을 보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 계속해서 의심해야 한다.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소셜미디어는 극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고,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를 유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음모론에 대해서는 레거시 미디어가 먼저 정확의 역할을 거쳐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검증해야 한다. 소셜미디어가 지닌 파급력은 레거시 미디어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더욱 위험하다. 이와 관련하여 손석희는 “소셜미디어가 그 위험에 저항할 수 있다”면서 “정보전달과 함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주장’을 담아낸다는 논리다.”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허무맹랑한 음모론이 계속 확산하는 이유에 대해, 2016년 JTBC의 ‘최순실(본명 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을 예로 들며 “어떻게든 스모킹건인 태블릿PC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논리가 무너지면 그들의 존립 기반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보다, 자신들의 논리적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음모론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이를 단순히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예컨대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부정선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부정선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 실제로 부정선거에 관한 음모론은 이미 여러 차례 법원과 국가기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지만,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판결조차 가짜뉴스라면서 계속해서 음모론을 주장한다. 김희원 한국일보 기자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질문들>에 출연해 “마이크를 대줘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마이크를 대주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문성이

없는 역사 강사를 언론이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 주장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정당성을 암묵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언론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인물의 견해를 무분별하게 인용해서는 안 되며, 명백히 사실이 아닌 음모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야 한다. 이는 대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언론의 책무다. 또한 사실과 의혹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취재원을 공개하거나 교차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기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도해야 할까. 이 책에서는 “기자들은 반드시 권력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자로 봉사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그 구체적인 실천 방식으로 ‘탐사보도’를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에서 탐사보도는 결코 쉽지 않다. 송수진 KBS 기자는 지난 2023년 6월에 방영된 <시사기획창> ‘코스닥 개미귀신’ 편에서 약탈적 무자본 M&A 세력을 집중적으로 취재하여 제165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상을 받았다. 송 기자는 해당 보도를 취재하는 데에만 꼬박 6개월이 걸렸다고 밝혔다. 즉, 1시간 남짓한 프로그램 하나를 위해 장장 6개월 넘는 시간을 들여야 했다. 이러한 탐사보도는 인력과 자원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KBS와 같은 공영방송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민영 언론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6개월이나 걸리는 탐사보도를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송 기자는 “공시된 정보를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대조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든다. 더블체킹을 하니 오류도 많이 나오더라. 시간적 제한이 없어서 성과가 적을 가능성도 있고, 눈초리도 많이 받는다. 사실 회사가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면 존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공영방송에서조차 탐사보도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기간 걸친 취재가 요구되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탐사보도를 선호할 유인이 크지 않다. 그런데도 탐사보도가 필요한 이유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저널리즘이 바탕이 된 탐사보도는 언론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16년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PC’ 사건이다. 이 보도는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며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저널리즘의 신뢰와 영향력을 극대화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흔히 ‘감시견(watchdog)’에 비유된다. 이 책에 따르면 워터게이트 특종을 보도한 밥 우드워드 기자 역시 감시견으로서의 원칙을 책임감 있게 지키기 위해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언론도 하나의 사회적 권력으로서 정부와 국회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손석희가 JTBC에 부임했을 당시만 해도 중앙일보와의 관계는 불편한 상황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홍석현 당시 중앙그룹 회장과 JTBC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고, 홍 회장은 청와대로부터 손석희를 교체하라는 압력을 받았으나, “자존심상 그럴 수는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손석희는 홍 회장이 청와대로부터 노골적인 위협을 받고 불쾌해했던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회고했다. 손석희가 JTBC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홍석현의 언론에 대한 안목과 결단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덕분에 손석희는 편집권과 인사권을 포함한 보도에 관한 전권(全權)을 부여받아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기사 제목에서 ‘단독’ 타이틀을 과감히 제거하고, 일시적인 어젠다 세팅을 넘어 지속적인 ‘어젠다 키퍼’ 전략을 실천한 것이 대표적이다. 비록 손석희가 JTBC를 떠나면서 이러한 실험도 막을 내렸지만, 그가 재직하던 시기에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언론 본연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언론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 덕분에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와 같은 역사적인 탐사보도가 가능했으며, 이는 곧 지금의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언론의 권력 감시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언론자유지수'가 자주 활용된다. 조갑제는 "언론자유의 후퇴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025년에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가운데 61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62위에서 한 단계 오른 수치이긴 하나, 문재인 정부 시절 40위권을 유지했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하락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자리하고 있다.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가 섞인 발언을 했다는 논란(일명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로 윤석열 정부는 MBC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법정 제재를 가하거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를 보였다.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했으며, 기자회견도 단 세 차례밖에 열지 않았다. 이러한 언론과의 단절과 국민과의 소통 부재는 결국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대한 확산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언론의 탄압과 억압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손석희는 1980년대의 '보도 지침' 시절을 회고하며 정치 분야는 무엇을 보도할지, 얼마나 다룰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도할지 등 상당 부분이 정부에 의해 정해지고 통제되던 세상이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대한 탄압은 군사 정권을 넘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좌편향 방송인 재기(再起) 차단으로 공정방송 풍토 조성'이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함으로써 저널리즘이 얼마나 정치권력에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자유 그 자체이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다. RSF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의 하락은 단순한 순위 변화가 아니라, 억압의 결과이며 탄압의 상징이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언론은 더욱 활발하게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 그것이 '살아 있는 권력'이든 '죽어 있는 권력'이든 상관없이 언론은 항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심과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언론의 권력 감시 못지않게 중요한 언론의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어젠다 키핑(agenda keeping)'이다. 어젠다 키핑이라는 개념은 JTBC가 삼성 노조 와해 사건 관련 문건을 보도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JTBC가 삼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과연 삼성 관련 이슈를 제대로 보도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그러나 손석희는 JTBC에 합류할 때부터 이미 삼성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형식적으로도 둘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다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손석희는 이전에 대외적으로 삼성 관련 사안을 공정하게 다루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기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이러한 대목에서 JTBC의 삼성 관련 보도는 어젠다 키핑의 출발점에 불과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JTBC는 약 300일 동안 팽목항에서 뉴스 보도를 이어갔다. 그 누구도 이토록 오랜 기간 참사 현장에서 보도한 적은 없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라는 의제를 단순히 설정(setting)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가며 사회적 관심을 유지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어젠다는 설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지켜내며 사회적 의제로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공론의 중심에 놓이도록 해야 한다. 다만 손석희는 어젠다 키핑을 실천하는 동안 '흡인력', 즉 시청률에 대한 고민도 함께 안고 있었다. 손석희는 "어젠다 키핑을 이어가는 문제는 늘 시청률이라는 척도에 의해 도전받았다. 우리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본다는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주었지만, 그걸 끝까지 이어가는 동안에 안팎의 반론이 늘 뒤따랐다. 밖에서는 정치적 의도라고 의심하는 쪽도 있었지만, 내부에선 시청률 걱정도 한몫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어젠다 키핑은 언론의 소명인 동시에 대중의 관심과 상업적 압박 사이에서 끊임 없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익 구조의 전

한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2011년 4월, 뉴욕타임스가 인터넷 기사에 대해 유료화를 선언했을 당시 상당한 비난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광고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구독 중심으로 전환해 성공한 사례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광고주와 사주(社主)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언론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유료 디지털 구독 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일부 언론사들이 유료 회원만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수익 구조에 도움이 될 만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구독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기존 광고 기반 모델에서는 ‘방문자 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반면, 구독 기반으로 전환되면서는 ‘독자가 한 달에 몇 차례 방문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며 기사를 읽는가?’, ‘기사를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공유하는가?’ 등 수용자의 관점에서의 상호작용이 더욱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았다고 말한다. 이처럼 광고 중심에서 구독 중심으로 수익 구조를 전환하면 독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지고, 보다 양질의 저널리즘을 실현할 수 있다. 반면, 광고 기반 수익 구조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권력 감시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앞서 살펴본 JTBC와 삼성 간의 관계에서 보듯, 레거시 미디어는 사주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특정 보도가 내부 데스크에서 거부되는 일이 빈번하다. 이는 언론사의 수익이 광고에 좌우되고, 광고 단가가 ‘신문 발행 부수’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행 부수를 검증하는 기관인 한국ABC협회가 부수를 고의로 부풀려 광고비 단가를 높게 책정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렇게 부풀린 신문은 비닐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 곧바로 재활용 업체로 들어가 계란판으로 쓰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포장지 용도로 해외에 수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ABC협회의 발행 부수를 더 이상 광고비 집행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열독률 조사를 포함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ABC협회는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비 집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언론이 광고주로부터 독립된 환경을 갖추어야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도가 가능해진다. 우리 언론도 외신의 구독경제 모델을 참고하여, 독자가 기꺼이 비용을 부담할 만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유료 구독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수익 구조의 변화와 함께 중요한 과제는 미디어 비평 기능의 활성화다. 현재 대부분의 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방송법」 제88조에 따르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의 선임 기준이 불투명하고, 활동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대부분 매월 한 차례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 위원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방송사는 해명하고 이를 청취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시청자들이 시청자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하지 않도록 방송사 내부의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언론에 대한 비평에서도 마찬가지다. 레거시 미디어는 자사뿐 아니라 타사, 나아가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널리즘 형태에 대해 가감 없이 비판하고 평론하는 문화를 갖춰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기비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자기비판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어 타사에 대한 비판마저 주저하게 된다면, 결국 누구도 진정한 저널리즘 비평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사실 이와 같은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KBS는 2003년 <미디어포커스>를 시작으로 <미디어비평>, <미디어인사이드> 등으로 명칭과 포맷을 바꿔가며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결국 2016년 폐지되었다. 이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2018년 <저널리즘 토크쇼 J>(이하 <저리톡>)로 부활했지만,

정치적 양극화 속 정파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저리톡>은 담당 PD와 제작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파적이라는 비판 끝에 결국 폐지되었다.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비록 정파적인 언론과 정치 지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저리톡>이 이를 심화시켰다는 KBS 안팎의 비난은 ‘과도한 정파성의 논리나 이에 기초한 공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는 <저리톡>이 폐지됨으로써 ‘거시적인 언론 환경의 굴곡진 형국과 의도된 정치적인 의제화의 함의도 비판적인 시선으로 엄정하게 돌아보아야 할 사유’의 기회 박탈이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리톡>은 언론 지형의 정파성을 심화시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파적 환경의 결과로 폐지되었다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언론이 스스로 정파적 프레임을 씌워 비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디어 비평은 범 저널리즘 영역에서 종종 ‘애물단지’ 정도로 취급되며, 기능적으로는 최소한의 명맥만 유지하는 불안정한 위치에 머물러 왔다. 그러므로 미디어 비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언론의 수익 구조 개편과 더불어,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 비평의 영역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 단순히 보도 내용에 대한 표면적인 비판에 그치지 않고, 언론계의 관행과 관습을 성찰하며, 저널리즘의 구조적·제도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비평 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대중과 시민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그들의 선택을 통해 뉴스 생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뉴스에 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뉴스 생산자와 편집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수요를 결정하는 주체는 시민이다. 좋은 저널리즘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나쁜 저널리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외면할 수 있는 ‘비판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대중과 시민은 언론을 감시하는 동시에 스스로 뉴스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언론은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잃어버린 신뢰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결국 언론의 힘은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

## \* 최 - 책을 읽고 느낀 점

이 책에서 “저널리즘의 본성은 철학적이거나 성찰적이 아니라, 반응적이고 실천적이다”라는 말이 나온다. 대의를 위해 투쟁하는 언론이 아니라 사실 확인에 최우선을 두는 현실적인 언론의 이상향을 다룬 책인 것이다. 책에는 다양한 사례의 언론 보도가 기록돼 있다. 사례 중심의 내용을 전개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언론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필자는 크게 사실주의(가짜뉴스), 자본주의(자본에 잠식당한 언론), 민주주의(균형을 지키지 못하고 좌우 중 한쪽으로 편향된 언론)라는 세 가지 틀에서 언론이 사실에 입각해 정의를 위해서 보도하는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토론했다.

한국 언론은 현재 이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세월호 오보 이후로 한국의 기자들은 ‘기레기’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때부터는 기자들이 어떤 행위를 해도 일단 기레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으며, 사회에서는 기레기가 일종의 밈으로 활용되는 느낌까지 있었다. 그러나 막상 뉴스에 속보가 뜨거나 단독 보도가 뜨면 시민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 한국 언론을 혐오하지만, 한국 언론이 쓰는 기사는 리터러시 없이 바로 믿어버리는 이중적인 구조가 언론 소비자들과 언론인이 함께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언론이 자본에 장악당했다는 소리는 여러 곳에서 들린다. 과연 사실일까? 박서연 기자와 금준경 기자가 미디어오늘을 통해 2022년 5월 20일에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기업의 언론 소유’ 현상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

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신문은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호반그룹 관련 동정 또는 홍보성 기사를 쓰지 않았으나, 호반그룹이 서울신문의 대주주가 된 이후에는 20개 넘는 호반그룹 관련 기사를 작성했다. 또한, 지난 1월 서울신문은 2019년 57건 넘게 연속 보도한 호반그룹 검증 기획 기사를 모두 삭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 기자들은 성명서를 내고 사측을 비판했으나 호반건설 소유 신문들은 침묵을 이어갔다. 즉, 서울신문은 호반그룹이 대주주가 된 이후로 해당 그룹에 대한 비판성을 상실하고 홍보성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미군정 이후 공화국이 등장하고 나아가 자본주의가 도래했다. 제3공화국 시절에는 언론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업조직화되고 위계서열화됐다. 이는 곧 언론사의 주주가 편집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본이 보도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제4공화국 시절에는 사원 기자들이 저항했으나, 제5공화국 시절에 언론사의 주주와 기자 간의 일치 공생관계가 형성돼 언론사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개혁도 실패했다. 즉, 현재 언론은 자체적인 비판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기업의 형태이면서도 ‘언론의 자유’라는 특혜를 받으며 더욱 거대자본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필자는 이런 현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기업의 하수인이 아니다. 기업 자본으로서의 언론과 보도 기관으로서의 언론은 분리돼야 하며, 언론사의 자율적인 편집권은 보호돼야 한다. 물론 대학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사주(대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는 모두가 더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언론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이어 제4부로 불린다. 권력 감시를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4번째 요소인 것이다. 때문에 언론을 생각한다면 정치적 부분을 떼고 생각할 수 없다. 한국 언론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 민주주의가 먼저 희망을 찾아야 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입법과 사법, 행정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언론이 가장 크게 비판받았던 때는 세월호 참사 당시였지만, 그전부터 꾸준히 비판받았던 부분은 사실상 양당제 속에서 갈라치기를 부추겼다는 점이다. 좌파 언론과 우파 언론으로 나뉘어 균형을 지키는 언론사를 찾기 쉽지 않은 현실점이기에, 좌우로 나뉜 한국 정치가 먼저 통합되고 회복되는 때가 돼야 비로소 한국 언론도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배\*휘 - 책을 읽고 느낀 점

정치권에서 쏘아 올린 극심한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이 시민들의 생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전달하고 있는 오늘날. 저널리즘, 즉 언론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예전만큼 언론이라는 존재가 주는 무게감과 중압감이 현재는 크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타파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부분은 “진실에 대한 의무”이다. 매체이해력이 강조되는 오늘날이지만 반대로 이해력을 거의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인 것 같다. 그런데 여기 허위 정보나 낚시성 보도가 만연하는 사회에서 이해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반복적으로 접한다면 언론에 대한 책임과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 할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콘텐츠인지 생각해 보는 과정만 거치더라도 가짜뉴스로 인한 타격을 조금이나마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MZ세대로 일컬어지는 청년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최근 들어 현저히 떨어진다는 기사도 접했다. 이러한 문제 역시 언론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지조차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절대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무게감 있는 교육을 통해 스스로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느낀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것은 자유롭지만, 그 후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견잡을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언론은 시민들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치적 편향성, 자극적인 내용, 독자의 반응에만 집착하는 경향으로 인해 언론이라는 개념의 근본과 본질을 상실했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언론인을 꿈꾸는 지망생으로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단순한 내용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신뢰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일삼으며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언론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

또 앞서 언급한 바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 시민들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이는 언론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책임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신용이 보장된 정직한 언론을 원한다면 그를 접하는 시민들 역시 중압감과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 건강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저널리즘은 특정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전달하기 때문에 모두가 흘러보내지 않고 의식하며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는 행위가 필요하다.

## \* 김\*현 - 책을 읽고 느낀 점

‘저널리즘의 첫 번째 의무는 진실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혼란스러운 원칙이다. 언론은 항상 진실을 전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필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책에서는 저널리즘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단순한 정확성 그 이상의 것이다.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때론 때초를 다루는 언론에게 진실이란 철학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개중에는 논리적 형태로만 봤을 때 “사실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는” 기사도 존재한다. 독자들은 더 이상 언론에 단순한 정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정확성이란 단단한 토대 위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진실로서 확보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진실”을 원한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진실은 정보가 제일 부족한 첫 기사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받는다. 진실이란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시간을 들여 우리가 아는 것들이 덜 잘못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진실에, 혹은 진실과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진실’해야 한다.

‘기자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가 발전해 오며 오늘날의 언론은 소위 권력, 시장, 플랫폼에 포획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권력을 위해, 돈을 위해, 플랫폼(알고리즘, 포털사이트 등)을 위해 일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일까? 아니다. 필자는 “저널리즘의 최우선적인 충성 대상은 시민들이다”라고 말한다. 언론 편집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경영적인 요소들은 대부분 대립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언론의 경영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언론은 단순한 기업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기자는 시민, 공중, 대중에게 충성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고용주가 아닌 이들 말이다.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워싱턴 포스트>의 ”이 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꼭 필요하다면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구절처럼 말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언론들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우리 언론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권력, 시장, 플랫폼, 정당, 이념, 편견, 세대에서 어떤 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은가? 광고주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 말이다. 또한 기자가 스스로를 위해 즉 개인의 돈과 명예, 아니면 타인의 불

행을 즐기는 비열한 동기등에 의해 일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

'사실 확인의 저널리즘' 오늘날 인터넷은 콘텐츠의 재전송을 아주 쉽게 만든다. 그리고 뉴스 흐름은 속도도 가속화시킨다. 이는 오보가 확산된 가능성의 증폭을 의미한다. 오보의 증폭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는 널렸다. 이제 시대는 뉴스가 권력을 갖고 '나를 믿어라'의 시대가 아닌 소비자에게로 권력이 이동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절대로 없는 것을 추가하지 마라' 기사는 소설이 아니다. 대중은 우리의 상상을 보러온 것이 절대로 아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추가하고 진실을 짜깁기 해 수용자를 속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수용자가 스스로 이 정보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용자가 믿을 수 있도록 진실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가능한 투명해야 한다. 기자들이 뉴스에 관한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알려야 한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스스로 하는 취재'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로 언론을 접하다보면 손 쉽게 앉은 자리에서 작성한 기사나 취재원의 말이 형태만 바뀐 기사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진실인지를 따지거나 최소한 직접 가보는 것이 아닌 기사들이다. 서로 '내가 더 빨라요'라고 자부하는 모습들은 두 눈 뜨고 봐주기 힘들다. 시간에 쫓기지 않는 기자가 어디 있겠냐지만 시간에 쫓겨 양심을 팔면 안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의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자기 스스로 하는 취재를 위해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확인된 사실'을 전해야 한다.

"권력을 감시하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제공하라", "기자들은 반드시 권력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자로 봉사한다" 이 원칙을 "편안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라"라는 말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주류 사회가 들어 주지 않는 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고, 정부의 부정을 드러내는 일과 함께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들을 조사하는 일에 책임을 갖는 것이 본질이다. 이를 위해선 탐사보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원래적 의미의 탐사보도는 기자들 스스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발굴, 취재해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보도를 뜻한다. 하지만 시기와 의미에 따라 해석적, 수사에 관한 보도 등으로 발전해왔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권력 감시보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기자들이 오히려 권력에 포획된 경우가 더 많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출입처 제도가 있다. 정부 부처나 기업, 관공서에서는 출입처 제도가 운영되어 기자들이 전담해 맡는 제도가 있다. 이는 독립적이어야 하는 기자가 종속되거나 동일시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다. 권력자 옆에 서서 힘 없는 자들의 목을 틀어 잡았다. "짜지 않은 소금이 무슨 소금이겠습니까"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기자들은 그들의 개인적 양심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모든 기자들은 반드시 개인적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정확, 공정, 균형 잡힌 기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사람들이 서로의 주장과 의견을 나누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론장과 자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양심을 실천하는 것은 공자님 말씀처럼 쉽지 않다. 뉴스 조직의 작동 방식은 통제하기 어려운 독재 체제에 가깝다. 취재 기자가 데스크의 항의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잘 먹히지도 않는다. 저널리즘의 위기가 대체로 재정 문제인 요즘 기자의 양심 또한 위기에 처해 있다. 개개인의 양심 표현을 혈학하면 뉴스의 품질은 좋아지지만 운영은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는 확실하다. 우리의 양심이다.

2025년 5월 1일

참가자대표 : 김\*아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헤드라인(Headline)							
운영일시 / 장소	일시 :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 장소 : 사회경영2관 13311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김*아	학번	2021****	이름	장*림
	학번	2021****	이름	정*성	학번	2021****	이름	최
	학번	2022****	이름	배*휘	학번	2024****	이름	김*현

\* 읽은 책: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빌 코바치, 톰 로젠스틸 하인리히 빌. 한국언론진흥재단(2021.12)>

\* 토의 내용: 저널리즘 기본원칙을 읽으며 생긴 주장이나 가치 판단을 토론하고, 현재 저널리즘의 보완할 점을 토의한다. (+ 이번 모임을 하기 전 각자 메이저 신문사의 1면을 읽고, 기사를 요약한 후 논평한 기록을 담았습니다. 각자의 의견란에는 신문 1면 요약 및 논평을 기록했습니다.)

\* 김\*아(참가자대표) - 신문 1면 요약 및 논평

250512 중앙일보

1. 나랏빚 비율 54.5%...기축통화 아닌 국가 평균치 넘어선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 비율이 처음으로 선진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IMF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D2)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넘어선다.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은 39.1%로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47.4%)보다 8%포인트 넘게 낮았다. 그러나 이후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복지 지출이 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리자 정부 씬씀이가 커졌다. 여기에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국가의 부도를 겪어 외환 위기를 겪었던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며, 국가 부도 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새벽 기습 후보교체 뒤, 당심 돌변했다...분란 남긴 국힘 23시간

국민의힘에서 '대선후보 교체'라는 한국 정당사 초유의 시도가 있었고, 당원 반발로 무산되었다. 10일 오전 0

시 당 대선 경선 1위를 차지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대신 무소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의힘 입당→대선후보 지위'를 부여하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시도는 당원 과반의 반대로 무위로 돌아갔다. "단일화 협상 의지가 있다"는 취지의 김 후보 측 물밑 접촉에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의총 개최시간을 1시간 가까이 미루고 대기했다. 하지만 후보 선출 뒤 의총에 처음 참석한 김 후보는 "강제 단일화엔 응할 수 없다"며 최후통첩을 하고 떠나버렸다. 격앙된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포함한 '플랜 B'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김 후보 측이 법원에 낸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 등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하나만 인용되더라도 당 지도부는 김 후보를 대선후보로 인정하거나, 후보 등록 자체를 포기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남부지법이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둘 다 기각 결정을 하면서 후보 교체를 위한 법적 리스크가 사라졌다.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분란이 일어났다. 서로 합의되지 않은 일들이 정당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당 내에서 합일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은 보는 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주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분란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 3. 이재명 "김문수는 내란비호 후보, 석고대죄부터 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과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가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김 후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주말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를 시도하다가 김 후보 공천이 확정된 데 대해선 "엉터리로 후보 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그래도 기존에 선출된 후보가 다시 됐다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개선할지에 대한 건전한 정책 대결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4. 김문수 "미래 파괴하는 이재명 세력 반드시 심판해야"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위대한 선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는 "반국가·반체제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오늘(11일)부터 우리는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방탄을 위해 줄 탄핵으로 정부를 마비시키더니 정부 전체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이쯤 되면 이재명 왕국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미래를 파괴하는 이재명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기사 제목과 내용은 서로에 대한 비판이 가득하다. 실질적인 정치권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문제이며, 기사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이 양극화를 일으켜 국민들까지 분열되는 것이 안타깝다.

## 250515 중앙일보

### 1. 비전 사라진 유세장, 네거티브가 판친다

"형수를 보통 욕하는 게 아닌 사람, 여러분이 확 찢어버려야겠지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3일 부산 유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과거 논란을 다시 끄집어냈다. 14일 경남 밀양 유세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내란에 어영부영 동조했다, 안 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13일 울산)이라고 했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김 후보를 "윤석열이 지지하고 전광훈이 조종하는 극우 내란 세력의 아바타"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등을 향해선 “내란 세력을 반드시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14일 창원)고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나이가 74세인데 뭘 성장시키냐”고 김 후보의 나이를 문제 삼았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다. 비방전은 매 선거마다 나타났지만 이번엔 그 배경이 조금 다르다.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우기 어려운 각 당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 파동으로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탓에 준비 부족으로 ‘반(反)이재명 정서’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선대위도 11일 꾸려졌다. 김 후보가 13일 공약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나, 14일 발표한 2032년 달 탐사·2045년 화성 착륙 등 과학기술 분야 공약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내용을 재탕한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우위인 상황에서 논란거리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분위기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지지율을 깎아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반발을 불러올 만한 정책은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리스크를 줄이자는 ‘부자 몸조심’ 전략이다. 구체적인 주제 의식 없이 목표만 이루고자 하는 양상이 보인다. 이재명 후보의 몸 사리기 공약과 김문수 후보의 공약 재탕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기사 제목처럼 비전이 사라진 네거티브한 유세장을 느낄 수 있다.

## 2. 이재명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재명 후보는 영남권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부산 시민들에게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해야 한다. 제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만큼은 약속드린다”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해운회사가 HMM이다. 그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 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 3. 김문수 “우주항공 획기적 지원”

김문수 후보는 사전 우주항공청에서 “우주항공 부문이 단기간에 크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게 집중 지원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관계자에게서 ‘예산 2조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2조원을 확보하면 뭘 할 수 있냐. 그림이 안 그려진다. 2조원 갖고 되겠다. 10배 정도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 4. 이준석 “부산을 확실한 금융도시로 키워낼 것”

이 후보는 “부산을 확실한 금융도시로 키워낼 것”이라며 “부산 금융특구에 있는 증권사와 거래하는 고객에게 더 낮은 증권거래세를 매기면 부산에 증권사가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해운회사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어설픈 괴짜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 5. 국힘, 윤 출당론 확산…전한길 “윤, 탈당 생각 전혀 없다.”

윤 전 대통령 탈당 혹은 출당론에 가장 적극적인 이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이다. 지난 1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명을 받은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민께서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공언했다. 그다음 날엔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 “당내 컨센서스를 도출해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며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건 저도 여러 차례 말한 적 있다”고 했고, 출당론과 관련해선 “여러 이야기를 듣고, 숙고 중”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3일 “당이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도리도 아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탈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14일 경남 사천 유세 뒤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과 김 후보의 메시지를 두고 당내에선 조율된 분리 대응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30대 청년 정치인인 김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강조하며 중도층을 향한 쇄신의 목소리를 낸다면, 김 후보는 집토끼인 지지층을 달래며 천천

히 한 걸음씩 내딛으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이 당원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치인들의 입장이 있는 그대로 신문에 실렸다고 믿어야 하는 걸까. 이 기사는 우리에게 김 의원과 김 후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신는 것을 넘어, 이 행동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음을 적시하며 저널리즘의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 6. 10만원 vs 655만원...교통사고로 똑같이 다쳐도 '합의금 64배 차'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주는 '향후치료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돼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료가 길어지면 보험금 지급 부담도 커져 더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향후치료비를 건네는 것"이라면서 "결국 합의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버티면 액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래 시행된 법과 절차에도 새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일상에서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원칙이다.

### 250516 중앙일보

#### 1. "탈당은 본인 판단" 윤 못끊는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여부를 두고 당내 진통이 커지는 가운데 김문수 대선후보는 15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민 배반이라는 현재 판단에 동의하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현재 판결이 8대0인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대0이었다"며 "현재가 만장일치 판결을 계속하는데,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지도자가 통치하는)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견해가 공존한다는 걸 보여주지 못한 현재는 매우 위험하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대선후보가 '탈당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 후보는 기자의 질문과는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의 판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갖고 있던 견해를 내놓았다. 김 후보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헌법 재판소가 다수에 휩쓸려 결정하는 현상은 분명 기피해야 한다. 특히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같이 국민의 관심과 여론이 언론을 통해서 주목받고 있을 때, 판결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탈당에 대한 문제를 윤 전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면서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호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 선을 긋고 있다는 견해도 가진다.

#### 2. 전공의 2400명 복귀 의사...정부 이르면 내주 추가모집 연다

이달 중 수련병원에 복귀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 5명 중 1명꼴이다. 이번 조사 결과가 실제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상당수가 입영 특례(수련 종료까지 입영 유예)나 수련 특례(종전 진료과목·연차로 복귀) 등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입영 특례는 국방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확답하긴 어렵다"면서도 "복귀 전공의가 수련 도중 입영하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했다.

#### 3. 김문수 유세에 안 보이는 의원들...만찬에도 소수만 왔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단일화 후유증 등으로 김문수 후보와 의원들 사이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에도 친한동훈계와 한 전 총리를 지지했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김 후보 지지에 나서지 않아서다.

#### 4. "李 테러할 블랙요원 암약"...민주당, 수천만원 방탄유리 주문

이재명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늘 방탄복을 착용한 채 유세 현장에서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이 후보가 유세 때 사용할 방탄 유리막 주문도 마쳤다. 공중전화 부스처럼 연결하는 후보 주변을 둘러싸는 이동식 방탄 설비다.

### \* 장\*림 - 신문 1면 요약 및 논평

#### 250516 한국일보

##### 1.尹과 끊지 못하는 국민의힘... 김용태-김문수 '탈당' 엇박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공식 요구하며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지만, 김문수 대선 후보는 판단을 윤 전 대통령에게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엇박자가 드러났다. 당내에선 이 같은 메시지 혼선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후보는 친윤·반탄 인사들을 선대위에 잇따라 영입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과 사과 없이는 당내 혼란 수습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 기사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문수 후보 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내부 혼선과 대선 전략의 불확실성을 조명한다. 특히 팩트에 근거해 인물의 발언을 인용하고 맥락을 설명하는 점에서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노력이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혼선에만 초점을 맞춰 자칫 갈등을 부각시키는 데 치우쳤다는 인상도 준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은 언론이 권력을 감시할 뿐 아니라 시민의 이해를 도울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한 갈등 묘사를 넘어 '왜 윤 전 대통령의 거취가 중요한지', '탈당 논란이 대의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해설이 있었다면 공익성과 해설 기능이 한층 강화됐을 것이다.

##### 2. 대상포진, 코로나 백신도 무료 될까... 성인 국가예방접종 확대 예고

정부는 현재 영유아 중심인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제도를 성인 대상 백신까지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예방접종 정보시스템 전면 개편에 착수하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고령화와 백신 기술 발달에 따라 대상포진, 폐렴구균 등 최신 백신 도입 필요성이 커졌으며, 성인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비용 부담 방식도 논의될 예정이다. 새 시스템은 모든 예방접종 이력을 기록·관리해 실수요 기반 정책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공익성과 시의성을 모두 갖춘 보건정책 보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보건 당국의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는 동시에 제도 변화의 사회적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인구 고령화, 백신 접근성, 비용 구조 같은 복합적인 요소를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로 뒷받침해 보도의 신뢰도를 높였다.

##### 3. 제주서 한미 '줄라이 패키지' 릴레이 협의 시작...미중 만남도 포착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관세·조선업 협력 등 통상 현안을 실무급부터 장관급까지 사흘간 릴레이 협의에 돌입했다. 특히 미국 통상 정책 핵심 인사인 그리어 대표가 방한해, 7월 예정된 '줄라이 패키지'의 중간 점검 성격도 갖는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며 국내 조선 대기업들과 면담도 추진 중이다. 미중도 관세 인하 합의 이후 닷새 만에 재회담을 가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에서 강조하는 '정확성'과 '맥락 제공' 측면에서, 회의 배경, 주요 인물, 협상 내용 및 향후 일정까지 풍부하게 서술해 뉴스의 깊이를 더했다. 다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슈인 만큼, 시민 사회나 산업계 반응 같은 '균형 잡힌 관점'이 아쉬운 지점으로 남는다. 후속 보도를 통해 한국의 실질적 이익이 무엇인지 독자에게 선명하게 전달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 정\*성 - 신문 1면 요약 및 논평

### 250512 경향신문

#### 1. 당심에 거부당한 '비민주'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하룻밤 쿠데타'의 후보 교체에 실패하며 결국 김문수 후보가 결국 대선에 나선다. 그러나 후보 교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전략 미스가 아니라, 권력 사유화와 민주주의 경시라는 구조적 병폐다. 불법계엄에 대한 무반성, 경선 룰 훼손, 새벽 기습 공고 등은 당헌과 당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선 승리, 후 절차'는 궤변에 당심마저 자극해 교체안을 부결시킨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당연한 결과다. 이쯤 되면 '정당 민주주의'란 간판만 남고 내용물은 증발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책임 회피다. 지도부는 "당원 뜻"만 반복하며 오남용된 권한과 파행적 의사결정에 대한 사과를 생략했다. 이 사태의 원흉을 불러온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사퇴했다. 친윤계는 패권을 유지하려다 친한계와 무당층 모두에게서 신뢰를 상실했고, 김 후보 역시 탄핵과 불법계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어부지리만 노렸다. 쿠데타 세력 청산이라는 반발이 당 내부에서조차 터져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리스크와 파편화된 보수정당의 맨얼굴이 동시에 노출됐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국민의힘 앞에는 '두 개의 시험지'가 놓여 있다. 하나는 후보의 정책 비전으로 유권자를 설득하는 일, 다른 하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해 스스로 정당성을 증명하는 일이다. 공천 쿠데타의 후유증을 수습하지 못한 채 정권 재창출만 외친다면 표심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내지 못한다면 이번 해프닝은 단순한 선거 전략 실패가 아니라 한국 보수정치의 구조적 위기를 고스란히 증언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유권자는 이미 그 답안을 채점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 2. 21대 대선 7명 후보 등록...12일부터 22일간 선거운동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중대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고, 이번 선거는 그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자 동시에 위기 극복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각 후보는 '반민주세력 척결', '이재명 심판', '세대교체' 등 다양한 이념을 내걸었지만, 유권자가 고민해야 할 핵심은 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회복시킬 자격이 있는가다. 단순히 정치적 수사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능력과 그럴만한 의지를 갖춘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다. 이번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 3. 검찰,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에 소환장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자료를 받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수차례 구두 요청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파렴치한 행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더는 경호나 정치적 수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둔다면, 이는 다시 민주주의를 짓밟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은 반드시 공정하고 엄격해야 한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이 실현되어야 할 순간이다.

#### 4.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전공의 300여명 복귀 희망 확인…투쟁을 위한 투쟁 멈춰야”

의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며 의료현장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투쟁 일변도의 흐름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과 대화의 여지를 모색하는 긍정적 신호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의 발언처럼 의료계는 이제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강 대 강'의 구도로 맞서면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시간을 허비했다. 정부가 이제라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사과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 따라서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를 마련하고, 수련환경과 교육의 양질을 개선한다는 구조적 과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의료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갈등의 소모전을 넘어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전공의들의 복귀는 단지 복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 250514 경향신문

#### 1. “반장 선거도 이래 안 해”…흔들리는 ‘보수의 심장’

TK, 즉 대구경북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핵심적인 정치적 뿌리이자 안전지대와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그 민심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예년만 못한 가운데, 다수의 유권자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으로 남아 있다. 이는 단순한 흐름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보수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 시도가 불려온 내용은 심각한 타격이었다. 당내 분열과 비상식적인 절차는 보수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은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반이재명' 정서만으로 결집을 꾀하기엔 이미 계엄과 내용으로 정치적 피로가 누적된 대구 민심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일방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여전히 반이재명 정서를 토대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마저도 맹목적 지지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중립적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증가하는 현실은 보수 진영이 더 이상 '반공', '지역주의'와 같은 전통적 프레임만으로는 민심을 확보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여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대안론이 아직 미미한 것도 유권자들이 단지 새로운 얼굴보다 확실한 비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구 민심은 지금 '지지할 사람'이 아닌 '지지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수 정치에 대한 심각한 경고이자 최후의 기회다. 정치권에서 이러한 변화를 읽지 못하면 결국 외면당할 것이고, 진심 어린 쇄신과 확실한 비전 제시가 뒤따른다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번 대선의 대구 민심이야말로 정치적 시대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격전지가 될 것이다.

#### 2. 포항시민 ‘지진 위자료’ 국가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대구고법이 포항 지진의 국가배상 책임을 뒤집었다. 지열발전이 촉발 원인임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와 기관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1심에서 판단했던 국가 책임의 무게가 항소심에서 사라지게 되

있고, 피해 주민들은 다시 소송과 입증의 벽 앞에 섰다. 이번 판결은 과학적 인과관계가 곧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대규모 국가 사업에서 사전 위험 관리와 정보 공개, 피해 구제 절차가 미흡하다면 결국 피해자는 증명의 어려움 속에 고통을 떠안는다. 사법부는 증거 원칙을 지켰다지만, 국가는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안전 의무의 경계선을 재점검하는 단계로 받아들여야 한다. 반복되는 대형 재난 앞에서 입증 책임만을 내세운다면 사회적 신뢰가 회복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이 아니라 정책 결정 단계에서부터 투명성과 사후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 3. [단독] 여야 갈등에 ‘등 터진’ 공수처, 올해 포렌식 예산 결국 ‘반토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디지털포렌식 예산이 반 토막 나면서 공수처가 과연 수사기관으로써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예산 삭감만으로 공수처의 위기를 설명하긴 어렵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기대를 모았던 것과 다르게 수사 능력 부족과 미숙한 조직 운영, 정치적 눈치 보기로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어 왔다. 예산 부족은 위기의 한 단면일 뿐, 본질은 공수처가 스스로 존재 이유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다는 데 원인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조차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국민들은 왜 공수처가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부터 기소하기 직전까지도 서로 우왕자왕하는 사이에 구속기간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결국 풀려나게 되었다.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이 여전히 구속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민주당이 외친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의 성역 없는 수사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 무능함의 밑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의 공수처는 세금을 갉아먹는 조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무기력한 감시자'로 전락하고 있다. 존폐의 기로에 선 지금, 공수처는 무능을 자각하고 스스로 개혁을 위해 환골탈태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선택하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 250516 경향신문

### 1. ‘불평등’ 이슈가 사라졌다…이재명도, 김문수도 “성장이 우선”

대선 국면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이재명, 김문수 등 유력 후보들 모두 '선 성장, 후 분배'를 내세우며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공약들을 내세웠고, 복지 확대나 소득 재분배 같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개혁 공약은 눈에 띄게 약화됐다. 이는 민주당의 중도화 전략과 맞물려 양당 간 정책 차별성이 희미해진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우선론은 과거 정부들의 정책 실패를 그대로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중심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OECD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포용적 성장'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말았다. 겉으로는 경제활력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안전망의 후퇴와 계층 간 격차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들과 저소득층, 고령층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의 삶은 수치로 나타나는 성장률보다 훨씬 더 깊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이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성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하며 그 열매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는가'가 훨씬 중요한 시대적 요구다.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곧 정치가 가장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란 회복과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민생을 책임지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세심히 살피야 한다. 유권자의 삶과 가장 가까운 문제인 '민생'과 '먹사니즘'은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한다. 성장이 곧 복지를 대체할 수 없다

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책적인 담론 역시 '얼마나 빠르게'가 아닌 '어떻게, 누구와 함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로 전환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성장은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향에서 비롯된다. 정치가 외면한 자리를 다시 민심이 채워야 할 때다.

2. 이재명 49.3%, 김문수 25.1%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9.3%의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5.1%에 그치며 보수 결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5.7%로 젊은층에서 일부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 후보의 우세가 굳건해 보이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의 향방은 여전히 주요 변수다. 특히 수도권과 2030세대에서의 이재명 지지세는 확고하지만, 막판 표심 이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진영 내 분열과 낮은 결집도로 인해 반등 여지가 제한적이며, 이준석 후보는 제3지대의 대안론으로는 미진하다. 이번 대선은 안정적 1강 1중 1약의 구도 속에서도 유권자의 마지막 선택이 결과를 뒤흔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도와 무당층의 선택이 진정한 민심의 방향타가 될 것이다.

3. [단독] 45년 전 불법계엄의 '그날'도 시민편에 섰던 군인이 있었다...이재춘 씨 최초 인터뷰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공군 방위병 신분으로 시민 편에 섰던 이재춘 씨는 계엄군의 명령에 맞서 양심을 택한 유일한 군인이었다. 그 대가는 징역 5년과 고문, 후유증, 그리고 결국 목소리마저 잃은 삶이었다. 45년이 흐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그에게 또다시 광주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이번엔 계엄군의 총을 대신해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 행보가 역사를 바꿨다. 특히 병력이 철수하자 "죄송하다"고 말한 군인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에게 민주주의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삶이 바로 민주주의가 피로 쓰여진 역사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5·18의 정신은 과거의 희생과 추모를 기리는 데 그쳐선 안 된다. 12·3 비상계엄과 같이 극단 무도함 속에 권력의 폭주를 막고 시민의 연대로 공공의 가치를 지켜내는 오늘의 실천이자 교훈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재춘 씨와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양심의 용기다.

## \* 최 - 신문 1면 요약 및 논평

### 250512 한겨레

1. 초유의 후보교체 소동...정당 민주주의 퇴행시킨 '막장극'

사상 초유의 '강제 후보교체' 시도에서 기사회생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등록하고, 박대출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등 공식 선거운동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친윤석열계와 당 지도부의 무리한 후보 교체 시도가 "정치 쿠데타"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비록 '당심'의 반발에 실패로 돌아갔지만, 당 지도부가 정당의 공식 대선 후보 선출 절차를 통해 뽑은 후보를 내치고 당권 투쟁에 유리한 외부 인사로 교체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ں 취지다.

->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적을 악마화함으로써 스스로를 선으로 규정한다는 것에 있다. 진보와 보수로 나뉜 두 집단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만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적을 앞에 두고 성문을 열어두는 바보는 없다. 모두들 마음의 문을 '황'하고 닫아 버렸다. 법의 그물망으로 적을 잡으려고 하고, 행정의 지팡이로 성문을 타격하려 한다. 편은 무언가를 가를 때만, 어떤 사항을 구분할 때만 생겨난다. 하

나의 요소를 갈라서 보기 시작하면 그 시각은 한없이 편협해지기 마련이다. 이제는 그만 나눠야 한다. 구분을 가장한 폭력을 멈춰야 한다. 적을 지칭하고 배척하는 것을 배우지 말고, 적을 용서하고 통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물론 이번 대선의 어느 후보의 말처럼 "역지로 이뤄낸 단일화에는 서사도, 감동도 없다." 더 거대한 적을 잡기 위해 편을 합치는 일은 또다른 편협함을 낳게 된다. 또다른 적을 낳기 위한 열린 마음은 비겁할 뿐이다. 진정한 열린 마음은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이 기반이 돼야 한다. 모든 진영이 성문을 열고 하나의 강줄기를 만들 때, 그 무엇보다 큰 힘을 낼 수 있다.

## 250514 한겨레

### 1. '윤석열 출당 없다' 못 박은 김문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탈당하라는 건 옳지 않다. (출당이나 제명 조치도)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 당내 탄핵찬성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내란 수괴 수호'로 치르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공약 검증에 대한 보도보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행보에 중점을 둔 건 사실 대선 기간 보도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다. 물론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당한 인물을 당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도 옳바르지 못한 태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약을 검증하고, 시민의 요구를 담아내도 모자를 판에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이런 내용을 썼다는 건 적대 정치에 기반한 보도라고 생각한다. 내란 세력 종식의 키워드를 맞추면 민생은 뒷전이 된다. 악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선한 가치를 찾아 존경을 표해야 할 때다. 누가 더 못났는가로 겨루지 말고, 누가 더 잘났는가로 겨뤄야 한다.

## 250516 한겨레

### 1. 12·3 내란 때처럼...광주에도 '정의로운 항명' 있었다

5·18 때 군의 전차 동원 지시를 거부한 이구호(1933~1999) 장군은 시민 무력 진압에 반대한 군인이다. 그는 1980년 5월21일 오후 4시께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이 "나 참모차장인데, 폭도들을 진압하고 도청을 점령하는데 전차를 동원해야겠다. 1개 대대(32대)를 동원하시오"라고 지시하자 거부했다. 김기석(1931~2010) 당시 전 투교육사령부(전교사) 부사령관(소장)도 신군부의 무자비한 진압에 반발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김 부사령관은 "당시 광주사태에 대한 실질적 지시는 계엄사령관보다 황영시가 더 관심 있게 지휘를 했었다"며 "심지어는 '무장헬기·전차 뒀다 어디다 쓰느냐'는 얘기까지 했다"고 생전 증언한 바 있다.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었던 안병하(1928~1988) 치안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해 발포하라는 전두환 반란세력의 명령을 거부했던 인물이다. 육군사관학교(8기)를 졸업하고 중령으로 전역한 뒤 총경으로 특채돼 경찰에 입문한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25일 "시민에게 총을 쏠 수 없다"며 신군부의 강제 진압 명령을 거부해 직위 해제됐고 합동수사본부로 끌려가 고문 수사를 받아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1988년 10월 세상을 떠났다.

->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게 보자면 악(惡)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철학자 맹자는 인간은 물가에 빠진 아이를 차마 지나칠 수 없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선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성선설(性善說)이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해도 현실에서 이를 발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악과 다를 바가 없다. 철학자 하나 아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이다. 사유 없이, 상층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근면하다고 칭송할 수는 없다. 5.18 때 아무리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이라도 군인 정신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항명한 군인만이 진정 나라를 지키고, 시민을 지키는 참군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인물을 조명해 현대 군 사회의 모범으로 내세우는 보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착한 사람을 본받는 건 사람이 성장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역할이 사회를 성숙하게 하고,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면, 좋은 보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 \* 배\*취 - 신문 1면 요약 및 논평

### 250512 동아일보

#### 1. 초유의 대선후보 강제교체, 당원들이 막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세우려 했던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되면서 김문수 대선 후보가 11일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자동응답전화(ARS) 조사 결과 매우 근소한 차이로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 당원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당내에서는 강제 후보 교체 시도 자체를 두고 “전례 없는 반민주적 폭거”, “심야의 정치 쿠데타”라는 비판과 함께 당 지도부 총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비상계엄부터 오늘날 대선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 대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정과 청렴의 개념의 발휘가 시급함을 느낀다.

#### 2. 이재명 광화문-김문수 가락시장서... 22일간 총력전 스타트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이 활발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탄핵 정국 속 광화문 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강조하고 ‘내란 종식’ 메시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려는 취지를 보이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과학기술 산업 육성을 약속하며 ‘경제 성장’ 키워드를 강조한다.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고용노동부 장관 이력을 가진 김문수 후보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등에서 얼굴을 비쳤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영남과 호남의 제조업 부흥을 공약으로 내놓은 데 이어 한국의 ‘러스트 벨트’ 격인 여수산단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늘 그랬듯이 대선 후보들의 쟁쟁한 공약 경쟁과 입지 싸움으로 인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정확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 3.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이번주 출석 통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전념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조사 출석을 통보했다. 11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9일 김 여사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 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공천에 개입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을 김 여사가 만약 출석 요구에 계속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 확보를 진행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 4. 韓 1분기 성장률 -0.25%... 주요 19개국 가운데 꼴찌

올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1일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5%로 현재까지 발표된 성장률 순위가 19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9개 국가 중 1분기 경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 미국, 헝가리 등 3개 국가로 이 중 한국이 가장 큰 가감을 보인 것이다. 미국은 물론 미국발 관세 전쟁의 최우선 타깃인 우리나라가 중국과도 차이가 매우 커진 것을 의미한다. 정치, 언론과 관련한 수많은 지속적인 혼란이

야기한 경제 부진이 큰 영향을 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다.

## 250514 동아일보

### 1. 3명 같은날 TK 유세... 격전지된 '보수 심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일제히 유세를 벌이고 있다. 이 후보는 "어릴 때 봤던 대구와 구미는 엄청 대단한 도시였는데 지금 보니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인구가 줄었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 역시 민주당을 겨냥해 "산은 하나 안 옮겨주는 이런 정당, 부산 사람들이 확 찢어버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며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콧 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최근 이 후보가 경제 정책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 시대에 맞지 않게 오히려 '박정희 주의'에 경도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2. 김문수 "계엄 최종" 다음날 "尹탈당 요구 도리 아니다"

김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이 대통령에게 '탈당해라' 또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만약 대통령이 잘못된 점이 있어 탈당하려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선 후보는 "봉건시대 군신유의도 아니고 국민이 왜 윤석열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며 김 후보를 직격했다. 언론에서 특정한 입장에 대한 의견이 완전히 정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건전한 방식을 통한 토론의 과정을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썰전은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 3. 트럼프 "90일내 합의 안되면 對中관세 높아질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90일간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중관세가 이번에 합의된 30%보다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중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하기를 전격 합의했지만 '관세 전쟁'이 끝난 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구조적인 사안들에 대한 협상이 계속될 것을 암시하며 앞으로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등 민감한 쟁점이 다뤄질 것을 시사했다.

### 4. "AI가 질병 진단... 스마트한 건강 관리 눈뿜어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2025 서울헬스쇼-도심 속 건강 축제"가 13일 막을 올렸다. 행사에는 스마트러닝존, 스마트헬스케어존, 슬림&안티에이징 등 8개 분야의 76개 부스가 마련됐다. 인공지능 영상 솔루션 기업인 뷰노의 심전도 검사기가 심전도 파형을 분석해 부정맥 종류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종합해 심장 나이를 산출하는 기술로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또 홈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뱀이 스캔 방식으로 척추 길이와 굴곡을 분석한 뒤 맞춤형 마사지를 제공하는 척추 관리 의료기기를 선보였다.

## 250516 동아일보

### 1. '李 구하기-사법부 압박' 법안 대선앞 무더기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 쿠데타"라며 총 공세에 나섰다. 6·3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무더기 입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 후보를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말을 덧붙였다.

### 2. TK 이어 PK... 연이틀 '낙동강 전투'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가 지역 민심을 얻으려 애쓰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 창원 '통영' 거제를 돌며 PK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순신 호국정신을 강조하며 '내란 종식'과 영호남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경남 진주와 사천, 창원, 밀양, 양산을 찾아 "논개의 호국정신"을 강조하며 '반 이재명' 유권자 결집을 시도했다. "이런 사람(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 3. 트럼프 "영원한 敵 없어"... 시리아 제재 해제 선언

중동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집권 뒤 '관세 전쟁'을 벌였던 중국과도 최근 스위스에서 협상을 가져 90일간 관세율 대폭 낮추기로 12일 합의했다. 이를 두고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실용주의'라는 평가와 '원칙 없는 좌충우돌'이란 비판이 동시에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가 시리아에 화해의 손길을 먼저 건넨 것은 지난해 12월 아사드 정권 붕괴 후 출범한 시리아 과도정부와 협력하는 게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의 우선순위는 항상 평화와 파트너십"이라며 "시리아, 행운을 빈다.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 달라"고 했다.

### 4. 삼성, 9년만에 2.4조원 빅딜... AI 인프라 獨 공조기업 인수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중앙공조 업체인 독일 '플렉트그룹'을 인수한다. 삼성전은 14일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턴이 보유한 플렉트 지분 100%를 약 15억 유로(한화 2조 4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플렉트는 데이터센터와 공항, 쇼핑몰 등 대형 시설에 설치하는 중앙공조 분야에서 유럽 내 1위를 달리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7억 3000만 유로를 달성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 부문장 직무대행은 "글로벌 종합공조 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공조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속해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김\*현 - 신문 1면 요약 및 논평

### 250512 한국일보

#### 1. 국힘 '후보 교체 추태'... 보수 정당 치명상

원칙도 능력도 비전도 없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를 갈아 치우는 과정에서 구태에 젖은 기성 정당의 추악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오로지 대선 승리의 불씨를 살리려 상식을 무시하고 보수의 핵심 가치를 내팽겨쳤다. 수차례 당내 경선을 거친 후보와 돌연 등장한 외부 인사를 여론조사만 앞세워 단일화의 구령령으로 밀어넣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당 민주주의를 외치며 반대하는 양심적인 목소리마저 외면했다. 당원 투표로 김 후보의 자격을 회복시켜 뒤늦게 잘못을 바로잡았지만 아무도 근본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한때 국정을 책임지던 국민의 힘의 현주소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기자들은 그들의 개인적 양심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모든 기자들은 반드시 개인적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것으로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마침내 균형, 정확, 공정한 기사를 써야한다. 기자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으로 쓴 글이다. 많은 장애물을 뚫고 왔지만 균형과 공정이라는 부분이 조금 거슬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강렬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어려 생각이 드는 기사였다.

### 2. 막 오른 미중 관세 협상 트럼프 “큰 진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관세 난타전을 펼쳐온 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시간)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 1막을 올렸다. ‘관세 전쟁’의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양측 간 이견이 크게 좁혀지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사실 확인의 저널리즘’ 확인될 사실의 객관성을 증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대한 당사자의 말을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고 있다. 또한 마지막 문장에는 날카로운 관찰이 돋보였다.

### 3.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시작” 김문수 “위대한 나라 만들자”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0시 시작됐다. 민심을 잡기 위한 22일간의 열전이 펼쳐진다. 차기 대통령은 계엄과 탄핵에 따른 사회 분열, 고착화된 저성장,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내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 힘, 이준석 개혁신당후보가 총체적 난제를 해결할 책임자를 자처하며 맞붙었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둔 오늘의 언론은 최대한 공정, 균형, 정확한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후보자들의 행보를 계속해 보도한다.

### 4. 깡통빌라 119채로 반년 만에 100억 대출 ‘전세사기의 전화’

“팀장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잘 지내셨죠?” 2021년 12월 어느 날, 서울 강남의 A 법률사무소에 나타난 임지명(모두 가명)씨가 팀장인 김종민씨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3년 정도 됐 까?’ 김씨는 오랜만에 등장한 임씨가 전혀 낯설지 않았다. 변호사를 만나러 한동안 드나들었고, 그때도 그는 유난히 깡뚫했다. <저널리즘 기본원칙> “권력을 감시하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제공하라”에 나왔던 탐사보도의 한 유형이다. 한 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세사기 문제를 취재했다. 주류 사회가 들어주지 않는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

## 250514 한국일보

### 1. AI·돌봄 장밋빛 공약, 재원도 로드맵도 없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냈지만, 구체적 로드맵도 재원 대책도 부족해 주먹구구식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후보들 내건 공약만 보면 달콤 그 자체다. 그러나 목표만 있고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인수위 없이 정권이 출범하는 만큼 정당과 후보 스스로 여느 대선보다 공약 실현성 검증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기자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답은 바로 시민이다. 시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투표하기 위해 언론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론장에서 토론될만한 주제를 던지며, 후보들이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 남발을 삼가도록 비판을 가하고 있다. “짜지 않은 소금이 무슨 소금이겠는가?”

### 2. 중국발 소액 직구 관세 美, 120%→54% 인하

중국과의 상호관세 전쟁에서 휴전에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 부과했던 관세도 대폭 낮

했다. 이로써 태무와 쉬인 등 소액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오늘날의 경제는 세계화를 통해 모두 이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정책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큰 영향을 끼친다. 다만 경제 부분은 언제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동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 3. 이재명·김문수·이준석 TK 결속… 대선 격전지 된 ‘보수의 심장’

주요 3당 대선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 공약에 나섰다. 초반 선점을 중요한 승부처로 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다르다.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TK 민심이 쪼개져 요동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그틈을 노리고 있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우리 사회의 지역 갈등은 오랜 숙명이다.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이야기에 언론이 앞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지역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탐사 보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시장(구독자)들의 속박된 언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 250516 한국일보

### 1.尹 못 끊는 국힘, 김문수·김용태 엇박자

김용태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둬 달당을 요청했다. 반면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이 중요하다”며 온도차가 뚜렷했다. 이날 앞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당의 미래와 보수 재건을 위해 오늘 중으로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기자들은 그들의 개인적 양심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모든 기자들은 반드시 개인적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정확, 공정, 균형 잡힌 기사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책임감,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색안경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객관적 진실을 넘어서 혼란이 느껴진다.

### 2. 트럼프 또 만난 정용진 카타를 국민 만찬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후로 한·미 가교 역할로 주목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째로 만났다. 그 장소는 미국도, 한국도 아닌 중동의 카타르였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힘없는 사람들인가? 그들의 목소리를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카타르에서 둘이 만난 것이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됐다.

### 3. 대상포진·페렴구균·코로나 백신 ‘성인 필수접종 시대’ 예고

정부가 예방접종 정책의 핵심인 국가필수예방접종(NIP)제도를 인구 구조와 백신 기술 변화에 맞춰 대폭 개선한다. 현재 영유아 무료 접종 위주인 NIP체계를 대상포진과 폐렴구균 등 다양한 성인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필자는 “저널리즘의 최우선적인 충성 대상은 시민들이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되는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 4. 한미, 제주서 ‘7월 패키지’ 릴레이 협의… 美·中 만남도 포착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통상장관회의가 막을 올리면서 한미·미중관세협의를 두 바퀴도 함께

굴러가기 시작했다. 관세 전쟁 휴전에 접어든 미중도 닷새 만에 다시 얼굴을 맞댄 만큼 이번 행사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관심이 쏠린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세계화로 전세계 경제가 이어진 오늘 경제 대국인 미중 관세 정책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큰 영향을 끼친다. 앞으로의 추세도 주목해 볼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5년 5월 22일

참가자대표 : 김\*아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헤드라인(Headline)							
<b>운영일시 / 장소</b>	일시 :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 장소 : 사회경영2관 13311							
<b>참석자 명단</b>	학번	2020****	이름	김*아	학번	2021****	이름	장*림
	학번	2021****	이름	정*성	학번	2021****	이름	최*수
	학번	2022****	이름	배*휘	학번	2024****	이름	김*현

**\* 읽은 책:**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하인리히 뵐. 민음사(2008.05)>

**\* 토의 내용:** 소설 내용을 기반으로 자유론의 이론과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사례를 찾아 토의한 후, 실제 소설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 논의한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치 판단을 토의 후 정정 보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김\*아(참가자대표) - 토론 흐름 정리 및 보충 의견**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책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한 여성의 인생이 망가지는 내용을 다룬 소설이다. 만약 정정 보도가 일어났더라면 결말이 달라졌을지에 대해서도 토론을 나누었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보면서 영화 조커를 떠올린 토론원도 있었다.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같이 생각해 봤다. 카타리나 블룸이 기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저지른 건 맞지만, 그에 앞서 기자가 먼저 카타리나 블룸에게 폭력을 저지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언론이 카타리나라는 인격을 살인한 것과 카타리나가 물리적으로 기자를 살인한 것 크게 이 두 가지 폭력에 대한 주장을 나눴다.

작품에 나오는 악의적인 언론사를 현실 세계에서 증오하는 언론사에 빗대서 표현했다는 거에서 작가의 사적 감정이 글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었다.

한 토론원은 미디어 법과 윤리라는 수업에서 수사 기관이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하거나 하면 법에 위배 되는 행위인데 이를 실제로 처벌한 사례는 한 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카타리나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근거이다.

그러면서 카타리나처럼 언론에 피해를 받았던 실제 이선균 등의 인물들을 재조명하며 유사한 사건을 얘기했다. 카타리나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카타리나 블룸에 대한 사람들의 시기나 질투 같은 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언론을 보고 그 사람을 단정 짓고 거기에 대해서 외설적인 말이 담긴 편지를 보낸다든가 택시에서도 택시 기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말같은 표현들이 대중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카타리나 블룸이 명예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언론사 스스로도 명예를 잃어버렸다. 언론의 명예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회 구성원의 명예 품위 또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잘 반증한 작품이었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취재 윤리가 너무 보장되다 보면 국민들의 알 권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언론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차이퉁이라는 신문사가 적극적으로 자극적인 보도를 한 이유가 사람들이 그렇게 써야 많이 보는구나 느껴졌던 구절이 인상깊었다.

언론의 보도가 한 사람의 폭력성을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책이었다. 한국 언론계에서도 정정 보도에 관한 법률이 좀 더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짜 뉴스를 걸러낸다는 측면에서 국민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때로는 진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세의 필요함을 느꼈으며 상식에 어긋난 사실보다 그럴듯한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더 쉽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뉴스를 보는 우리의 자세가 뉴스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 \* 장\*림 - 책을 읽고 느낀 점

하인리히 뵐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현실을 날카롭게 반영한 경고문처럼 느껴졌다. 소설은 평범하고 성실한 여성 카타리나 블룸이 한 남성과의 짧은 만남 이후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인해 삶 전체를 잃어가는 과정을 따라간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 그리고 그 폭력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책을 읽으며 나는 영화 조커가 떠올랐다. 조커는 명백한 범죄자다. 영화가 끝날 때, 그의 폭력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가 그 지경까지 몰려가게 된 이유에는 나도 모르게 납득이 가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더욱 무서웠다. 그가 왜 웃지 못하고, 왜 점점 무너져갔는지 이해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공감하고 있는가?" 이 감정은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의 결말, 카타리나가 기자를 총으로 살해하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찾아왔다. 그녀가 한 행동은 명백한 범죄였고,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그녀가 그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언론이 가한 폭력들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게 되는 스스로가 두려웠다. 카타리나의 방아쇠에 손이 닿기까지, 기자들이 수없이 던졌던 말들과 사람들의 시선, 외설적인 편지, 택시기사의 농담은 결코 단순한 말이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곧 하나의 무기였다.

토론 중 다른 학우들과도 이 두 가지 폭력, 즉 언론이 가한 언어적 폭력과 카타리나의 물리적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떤 폭력이 더 무거운가'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언론이 카타리나의 인격을 살해했고, 카타리나는 기자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 둘을 단순히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기보다는, 언론이라는 힘이 사람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다. 한국 사회에서도 '언론에 의해 명예를 잃은' 실존 인물들을 떠올릴 수 있었고, 언론이 한 사람을 어떻게 소비하고, 해석하고, 왜곡해나가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했다. 나는 카타리나가 명예를 잃기 전, 사실 언론이 먼저 명예를 잃었다는 말에 동의한다. 언론의 품격이 무너지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품격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균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언론은 진실을 전달하는 창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칼날이 될 것이다. '자극적인 기사일수록 잘 팔린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언론의 현실은 단지 언론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을 소비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진실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가짜 뉴스는 쉽고 그럴듯하기에 더 위험하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나에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묻는 책이었다. 뉴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뉴스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다. 조커와 카타리나, 두 명의 범죄자는 내게 묻는다. "당신은 우리의 폭력에 공감했나요?" 나는 그 질문이 여전히 마음 속에 남아 있다.

## \* 정\*성 - 책을 읽고 느낀 점

오늘도 우리는 뉴스의 제목만 보고 기사를 공유한다.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영영 비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 말이다. 과연 우리는 '진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인리히 뵐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반세기 전에 일어난 한 타블로이드지의 보이지 않는 폭력을 고발했지만, 오늘날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여전히 섬뜩한 현실감을 준다. '카타리나 블룸'이라는 소설 속 등장인물은 곧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소설을 통해서 허위 정보가 개인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성찰해 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카타리나의 비극은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언론의 윤리적 규범을 완전히 무시한 데에서 비롯됐다. 이는 첫 단추부터가 그랬다. 《차이통》은 경찰 내부의 미확인 첩보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교차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테러리스트 애인"이라는 제목을 1면 머리기사로 내보냈다. 이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언론의 의무와 형사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동시에 위반한 보도였다. 이어지는 다른 언론들 역시 악의적인 과장과 선정적 수사(修辭)로 독자의 공포와 분노를 의도적으로 자극했다.

윤리적 규범의 위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간판 기자 베르너 투트게스는 취재 대상의 사적 영역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병세가 위중한 카타리나의 어머니를 찾아가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 그 결과로 어머니가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지만, 신문은 "충격적 가족사"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처럼 고인과 유가족의 고통을 단순한 흥밋거리로 소비한 것은 사자(死者)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한 행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차이통》은 카타리나의 주변 인물들의 실명과 주소, 직업을 무분별하게 공개해 2차

피해를 불러오기도 했다. 이는 취재로 얻은 개인정보로 사회적 매장과 낙인을 초래한 명예훼손이자, 기자의 권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남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트게스의 녹음파일을 기사화하면서는 폭력을 미화한다는 보도준칙까지 어겼다. 요컨대 《차이통》은 사실성과 공정성, 공익성, 그리고 인권보호라는 언론의 윤리적 규범을 모조리 허무는 데 그치지 않고 카타리나 개인의 인격뿐 아니라 언론 스스로의 명예까지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1970년대의 시대적 흐름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은 여전히 언론과 소셜미디어가 짜낸 ‘조회수 경제’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배우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가 마치 ‘확정 사실’처럼 소비되는 과정에서 마녀사냥을 비롯한 각종 악플에 시달렸고, 사건의 경위조차 명확히 정리되기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의 죽음 뒤에 언론은 발 빠르게 “수사기관과 언론의 마녀사냥이 또 다른 희생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실었지만, 정작 생존해 있을 때는 흥미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확대 재생산했던 것이 바로 언론이었다.

지난 2월에는 배우 김새론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추성훈이 장례비를 전액 부담했다’는 각종 추측성 기사와 유튜브 영상이 순식간에 퍼졌다. 당사자인 추성훈은 “사적 친분도 없다”며 명백한 가짜뉴스임을 바로잡았지만, 관련 영상은 이미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뒤였다.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인을 둘러싼 열애설과 채무 분쟁 의혹이 이어지면서 배우 김수현은 ‘소아성애자’로 낙인찍혔고, 심지어 해외 매체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아동 성 착취”와 같은 선정적인 단어가 수식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언론은 “김수현 차기작 올스톱”, “국제 여론 싸늘”과 같은 자극적인 보도를 이어갔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가족들의 인터뷰와 짜깁기식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측근의 측근’을 인용한 발언들은 사실상 ‘인민재판’의 증거로 활용됐다. ‘그의 비참한 죽음조차 화려한 엔딩신으로 편집된다’라는 자조가 나올 법한 모습이다. 소셜 속 《차이통》이 허위 정보를 공권력의 묵인 아래 확대했듯이 오늘날 언론과 소셜미디어도 조회수와 관심을 미끼 삼아 윤리적 안전핀을 손쉽게 제거한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질문 앞에 선다. “오늘은 누가 카타리나가 될 차례인가?”

사건 사고와 의혹을 담은 스캔들은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쉬운 소재지만, 언론이 이를 다룰 때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아니라 다음의 원칙들을 중시해야 한다. 먼저 ‘정확성’이다. 익명의 제보나 측근의 전언만으로 단정 짓지 말고 최소한 서로 다른 독립된 출처를 바탕으로 교차 검증을 거친 뒤에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가정법이나 조건부 표현으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익과 알 권리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요구된다. 공인의 사생활이 공적인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전달하지 않아야 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대상의 실명이나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인용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해악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취재 과정에서 가져올 피해자의 심리적인 영향과 사회적 파장을 가늠해 2차 피해를 예견하고, 수사 중인 단계에서는 ‘단독’과 같은 표현이나 직접적인 문구 대신에 분명히 드러난 사실 관계를 위주로 보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책임의 투명성과 정정보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최초 보도와 동일한 위치에 정정보도를 내어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취재 과정과 이해관계 여부를 기사 끝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사의 잘못된 내용이나 오류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자극적인 '속보 경쟁'이 빚는 폐해를 끊어 줄 안전판이다. 언론은 공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감시견이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메가폰이 아니다. 가십거리의 달콤함과 광고 수익의 유혹에서 벗어나 사실과 공익, 인권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에 세울 때만이, 또 한 명의 카타리나 혹은 '제2의 이선균'을 예방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언어는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이 공유하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언론은 단어와 표현 하나하나에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설 속에서는 카타리나가 경찰 조서의 문장에 대해 논쟁을 이어가는 대목이 나온다. '다정함'과 '치근거림', 그리고 '선량한'과 '친절한' 사이에서 단어의 선택은 어감이나 의미의 차이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차이가 인물의 성격과 행위를 재구성해 독자적인 서사를 만들어 내고, 언론은 그 서사를 다시 기사 제목에 활용해 또 다른 '가십'으로 유통한다. 결국 언론의 언어는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독자의 감정 버튼을 누르는 전략적 장치가 된다. 현실에서도 '폭행' 대신에 '따귀 한 대'라거나 '폭력 사건' 대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할 때 여론의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언론이 단어를 고를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표면적 사실이 동일하더라도 단어 하나가 누군가의 명예와 진실을 결정지을 수 있다.

가짜뉴스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동인이 된다. 가짜뉴스가 단지 진실이 아닌 거짓된 정보를 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가짜뉴스가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되고, 결국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짜뉴스는 일차적으로 사실 관계를 교란해 공동체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 기반을 훼손한다. 그러나 더 큰 폐해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넘어, 사람들의 분노와 혐오, 공포 같은 감정을 유도해 일방적인 방향으로 표적을 설정한다는 데 있다.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대중들은 자신이 이미 갖고 있던 편견을 강화해 주는 콘텐츠만 소비하고 공유하며, 알고리즘은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의 편향도를 더욱 높인다. 이렇게 형성된 '에코체임버' 안에서는 상대 집단의 목소리가 증발하고, 토론과 타협 대신 비방과 배제의 언어만 일상화된다. 따라서 각자가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극단적인 현상을 불러오게 된다. 최근 허위정보로 촉발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음모론적 낙인찍기,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종교, 성별에 대한 갈라치기는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비롯된다. 더 나아가 가짜뉴스는 사실 검증(팩트체크)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하고, 언론이나 학계, 사법기관의 권위를 계획적으로 깎아내리게 만든다. 이는 결국 사회적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양극화 속에서 협력보다는 갈등이, 대화보다는 진영 대결만 남게 된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가 보여 준 것처럼, 허위 보도가 공적 담론을 장악하면 개인은 권리는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명예에 대한 증명 속에 갇히고, 사회 공동체는 적대적 감정의 조각으로 쪼개진다. 따라서 가짜뉴스는 정보의 오류를 넘어 민주주의의 토양 자체를 침식시키는 사회적 독소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가짜뉴스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민주적 토론의 장을 잠식한다.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정보 환경에서 '검증'은 더 이상 전문가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공동의 책무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가짜뉴스를 거를 구체적인 습관을 일상에 실질적으로 녹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행위가 필요하다. 팩트체크 행위는 관련 이슈에 대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믿을만한 다양한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잘못된 믿음이나 인식이 낮추는 것이다. 오늘날의 정보 환경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어떤 매체를 보느냐'가 아니라 '그 매체를 어떻게 대하느냐'다. 팩트체크는 사실 거창한 과정보다 작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기사 제목이 유독 자극적이거

나 선정적으로 보일 때, '왜 이런 표현일까?'를 스스로 묻는 순간, 우리는 이미 검증의 첫 단계를 밟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팩트체크는 특정 매체를 통해 편향된 정보를 가지는 국민의 정서적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켜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한 민주주의의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는지 살펴보고, 비교한다면 하나의 사실에도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는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소비가 단순한 수용을 넘어 비교와 검토의 과정으로 확장되어야 비로소 팩트체크가 가능해질 수 있다. 가짜뉴스를 막는 최전선은 복잡한 알고리즘 뒤가 아니라, 매일 스마트폰 화면을 마주하는 우리 각자의 습관 속에 있다.

소설 속 카타리나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자극적 헤드라인도 대중의 선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게다가 우리는 모두 가짜뉴스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가짜뉴스를 신봉하고, 유포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것들에서 잠시 멈춰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관점으로 대화의 장을 열어 두는 노력이 가짜뉴스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 **\* 최\*수 - 책을 읽고 느낀 점**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다. 거짓 정보를 전하는 행위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행위다. 이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책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한 여성의 인생이 망가지는 내용을 다룬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는 언론의 팩트체크가 안 된 보도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 보여준다. 작품 안에 나오는 차이통이라는 신문사는 카타리나에 대한 적대적 기사를 쏟아내며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다. 언론사가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살인한 거나 다름 없다.

책 제목에 있는 명예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고 싶다. 언론이 품격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언론이 품위가 있어야 보도대상자의 품위도 지켜줄 수 있다." 만약 언론이 가짜뉴스나 오보 등으로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순간이 온다면, 신문 속 기록된 사람들의 명예도 같이 실추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언론의 명예가 다른 단체의 명예보다도 유독 중요하다. 소설 속 차이통은 이미 스스로 명예를 잃어버렸다. 그렇기에 카타리나 블룸도 명예를 잃어버린 것이다. 필자가 속한 학과 특성과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자치기구 특성상 실제로 기사를 써야 할 일이 많다. 이 책을 읽으며 필자도 혹시 기사를 쓸 때 천박하거나 적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기자로서 품위를 잃지는 않았는가 반성하게 됐다. 앞으로 기사를 쓰는 데 있어 자기검열에 힘써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대한 독서 토론에서도 얘기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자신의 표현이 닿는 모든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현시대는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은 줄이고 시민의 자유를 늘리자는 것이다. 만약 언론이 이런 흐름 속에서 성숙해있지 못한다면, 확대된 자유를 소유했을 때 고삐 풀린 말처럼 날뛰며 많은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다. 때문에 언론인의 책임 의식을 한 번 더 고찰할 수 있었다.

논외로 어디까지가 왜곡인가를 고민하기도 했다. 작품 속 차이통은 완벽하게 왜곡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러

나 현실 세계에서는 애매모호하게 왜곡된 경우가 많다. 가령 인터뷰 후 인용문으로 문장을 작성할 때 기자의 주관에 섞여 원래 인터뷰이가 말했던 표현이 변질되거나, 기사 사진이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명암이나 색감을 조정하는 경우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둘 다 왜곡으로 쳐야겠지만, 맥락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는 허용하는 게 현 언론계의 지침이다. 다만, 맥락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건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기사가 출고되기 전 많은 기자들의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기자에게 최고의 칭찬은 “미련하다”이다. 단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모든 문장을 꼼꼼하게 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방법론 또한 미련하다. 아무리 부정의한 상황 속에서도 품격있고 정석적인 문장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은 비인격적인 인간이라도 인간적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자라도 존칭을 붙여야 하며, 그들의 악행을 과장해서 보도하면 안 된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문제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피의자가 범죄자로 확정됐을 때 신상을 조심스럽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품 속 차이통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다고 낙인찍힌 카타리나 블룸을 인간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필자의 의견이다.

작품 속 차이통의 기사들은 거의 다 오피니언과 팩트가 섞여있는 혼합형 기사다. 현 시대 언론들은 팩트 기사와 오피니언 기사를 명확히 분리하는 걸 절대적 원칙으로 삼는다. 의견을 사실로 위장하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차이통은 교묘한 방법론을 이용해 독자들을 호도하며 카타리나 블룸의 삶을 비난하고 있다. 현대 언론인으로서 보면 굉장히 비판할 부분이다.

앞선 자유론과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서는 언론의 이상적인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다. 그러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에서는 언론이 행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을 가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무제한적인 자유가 확산이 됐을 때 언론이 절제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폭력이 발생하고, 그 폭력은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이번 토론으로 이 사실을 명심하고 조금 더 겸손한 태도로 언론인을 꿈꿀 수 있게 됐다.

## \* 배\*휘 - 책을 읽고 느낀 점

이 책을 읽고 필자가 단순한 하나의 문학작품을 넘어서 언론과 사회를 집중적으로 헤집어 놓음으로써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싶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냉전 시기의 독일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테러와 반테러, 좌우 이념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 속의 작품이라는 점이 크게 와닿았다. 그렇다고 언론이라는 제도와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이들에게 비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마냥 무겁게 느껴지지만은 않았다. 빌 이 작품을 통해 언론이 진실의 전달자가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파괴하는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점에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카타리나를 방은 조용하고 차분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이다. 그러나 우연히 파티에서 만난 한남 성과의 하룻밤을 보낸 이후, 그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그 남성이 경찰 수배 중인 인물이라는 이유로, 카타리나는 단번에 ‘테러리스트의 연인’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고 만다.

작품 속에서 이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과장하며 보도하는 언론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카타리

나를 마치 범죄자처럼 묘사하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함으로써 대중의 이목을 끌었으며, 판매 부수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을 뒀다. 여기서 우리는 언론이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진실보다 흥미와 반응을, 윤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여겨진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카타리나의 명예가 침몰하는 과정은 그녀의 사생활이 어떻게 침해당하고 조작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언론은 왜곡된 방식으로 보도하여, 그녀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간으로 몰아간다. 한 인간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카타리나라는 인물은 끝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심리적으로 견잡을 수 없는 깊은 구멍에 빠지게 되었다. 이처럼 언론은 보도 대상이었던 카타리나를 하나의 상품으로만 생각한 것이었다. 빌 은이 러한 비인간적 언론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언론의 어두운 뒷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카타리나를 방의 잃어버린 명예』를 오늘날에도 더욱 타격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한다. 예전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태가 된 언론 환경 속에 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언론과 미디어는 단순히 신문과 방송을 넘어, 유튜브 채널, 트위터, 블로그 등 수많은 자율적 매체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누구나 '언론인'이 될 수 있는 시대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책임감, 윤리의식 그리고 비판적 수용 태도이다.

### \* 김\*현 - 책을 읽고 느낀 점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한 여성의 인생이 비극으로 치달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27살의 평범한 여성이 일간지 기사를 총으로 쓰고 경찰의 자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간을 오가며 역류하는 전개 방식은 소설 특유의 긴장감을 불러왔습니다. 카타리나는 한 댄스파티에 참여해 괴텐이라는 남자를 만나 같이 춤을 추고 집으로 향합니다. 잠시 후 가택수색을 하러 온 경찰들에게 남자의 실상을 알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카타리나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문 <차이통지>는 그녀에 대해 편견과 거짓이 뒤섞인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황색 신문이었습니다. 퇴트게스란 기자는 객관적 진실이 아닌 스스로가 믿는 것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을 기사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어, 하나의 표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카타리나와는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론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는 과정 속에 함께했던 것은 부단 기자와 신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없이 신문의 모든 정보를 사실이라 맹신했던 대중들의 반쯤 감은 실눈은 진실을 더 왜곡되게 만들었습니다. 살인범의 약혼자인 카타리나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드라이빙을 취미로 들린다는 기사를 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질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질투심으로 가득 찬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기꺼이 카타리나에게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차이통지의 기자 퇴트게스의 끔찍한 만행을 보며,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갖고 있던 '이용된 모든 말은 편집되선 안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진실이 아닌 돈, 대중의 흥미,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처참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유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론의 힘은 오늘날에도 막강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편견을 이기는 것은 힘듭니다. 누군가는 반론의 기회조차 없이 인터넷 속 수많은 곳으로 자신의 얘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번 독서 토론에서 읽었던 자유론은 억압된 자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았지만 이번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정돈되지 않은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참가자대표 : 김\*아